

충청권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통합방안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for the competitiveness
intensification of the Chungchong province

김태현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태현 /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서 문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경제권 논의가 최근 들어 매우 지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충청권에서는 MB정부 이전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2007년 2월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간에 학술연구교류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경제협의회와 3개 시도 공동발전연구단이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권 경제협력 논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발전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문제, 제도적 장치나 협력기구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자원수준과 문화, 이기주의 극복문제 등이 성공의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현안문제를 공동대처해 나가는 한편, 인근 광역권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역내 기업간, NGO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지역권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협력사업은 3개 시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분야, 3개 시도 공유이익 창출이 큰 분야,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3개 시도간 협력뿐만 아니라 충청광역경제권의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충청권 지역경제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위해 수고한 연구진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8. 12.

대전발전연구원장 육동일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2장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지역경제통합의 글로벌 추세	9
1. 외국의 지역정책	9
2. 지역정부간 협력에 관한 해외사례	14
제2절 충청권 경제통합의 필요성	17
1. 충청권 지역여건	17
2. 충청권 경제의 주요 특징	21
3. 충청권 경제통합 추진의 필요성	22
제3장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충청권	25
제1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27
1. 여건의 변화 및 시대적 요구	27
2.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27
3.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29
4. 지역경쟁력 제고 지원방안	31
5.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34
제2절 충청권 경제협력 추진상황	42
1. 충청권경제협의회 추진경위	42
2. 충청권경제협의회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43
3. 충청권경제협의회 운영현황	44
4.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전방안	45

제4장 충청권 경제협력에 관한 실증분석	47
제1절 충청권 경제협력 설문분석	49
1. 충청권경제협의체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	49
2. 충청권경제협의체의 필요성, 전제조건, 저해요인에 관한 설문	55
3. 충청권 경제협력방안 관련 설문	63
4. 응답자 개인적 사항에 관한 설문	80
제2절 온천관광협력 설문분석	87
제3절 실증분석의 시사점: 문제점 및 협력방향	102
1. 충청권 경제협력 설문분석의 시사점	102
2. 온천관광협력 설문분석의 시사점	103
제 5장 충청광역경제권 협력방안	105
제1절 대전·충청의 발전방향	107
1. 대전광역시 도시개발방향	107
2. 충청도의 발전방향	107
제2절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108
1. 충청권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 시행	109
2. 충청권 공동 투자에 의한 시범지구 지정	109
3. 충청권 경제 협의체 구성	110
제3절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11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11
2.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	112
3.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	113
4.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113
5. 서해선 물류철도 조기착수	114
6.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114
제4절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115

1. 충청권 공동추진 협력사업	115
2. 충청권 시범사업	117
3. 충청권 공동발전 구상사업	120
제 6장 결론	139
참 고 문 헌	145

- 표 목 차 -

<표 2-1> 충청권 인구규모	17
<표 2-2>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교	18
<표 2-3> 충청권 지역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	18
<표 2-4> 충청권 전략산업	19
<표 2-5> 충청권 지역별 클러스터	20
<표 2-6> 충청권 강·약점	21
<표 3-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29
<표 3-2> 초·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전략	30
<표 3-3> 초광역권 개발 추진 방향	31
<표 3-4> 5+2 권역별 특화발전 비전	35
<표 3-5> 국가균형위원회-5+2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	36
<표 3-6> 기획재정부-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38
<표 3-7>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41
<표 3-8>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 3개 시·도지사 협약서	43
<표 3-9> 충청권경제협의체 위원구성 현황	44
<표 4-1> 충청권경제협의체 출범 사실	49
<표 4-2> 충청권경제협의체 차원의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	50
<표 4-3> 충청권경제협의체에 대한 정보수집 매체	51
<표 4-4> 충청권경제협의체에 대한 시민홍보의 필요성	52
<표 4-5> 충청권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성과 홍보 매체 수단	53
<표 4-6> 충청권경제협의체의 출범 배경 및 당위성에 관한 동감	54
<표 4-7> 충청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56
<표 4-8> 충청권경제협의체 발족되기 전 충청권의 경제협력 성과	57
<표 4-9> 향후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전망	58
<표 4-10> 충청권경제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60

<표 4-11> 현 시점의 충청권 경제협의회 활성화 저해요인	61
<표 4-12> 충청권경제협의회 사무국의 적합한 설치형태 및 장소	62
<표 4-13>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족 시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	64
<표 4-14> 1) 문항 외의 중요한 지역협력 사업	66
<표 4-15> 지역협력 사업 중요도	67
<표 4-16>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	69
<표 4-17>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부진한 분야	70
<표 4-18> 충청권지역 경제협력사업(과제) 발굴 방법	71
<표 4-19>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협력 발전 기여도	72
<표 4-20>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도	73
<표 4-21>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수혜지역	75
<표 4-22>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비수혜 지역	77
<표 4-23> 경제협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78
<표 4-24> 충청권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79
<표 4-25> 응답자의 성별	80
<표 4-26> 응답자의 연령	81
<표 4-27>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소속단체의 지역	82
<표 4-28> 응답자의 직업 또는 소속 단체	83
<표 4-29> 응답자의 현 직장 종사 기간	84
<표 4-30> 응답자 직장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여부	85
<표 4-31> 응답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86
<표 4-32> 온천 이용 목적	87
<표 4-33> 온천 관광 횟수	88
<표 4-34> 온천 관광 형태	89
<표 4-35> 온천 관광 시 방문기간	90
<표 4-36> 온천 관광 시 숙박시설 이용형태	91
<표 4-37> 온천 관광 시 식사방법	92
<표 4-38> 온천 관광 시 지출비용	93

<표 4-39> 온천 관광지에 대한 정보습득	94
<표 4-40> 응답자의 성별	95
<표 4-41> 응답자의 연령	96
<표 4-42> 응답자의 직업	97
<표 4-43> 응답자의 거주 지역	98
<표 4-44> 온천관광지의 경쟁력	99
<표 4-45> 온천관광지의 매력성	100
<표 4-46>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101
<표 5-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	105
<표 5-2>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상황	109
<표 5-3> 충청권 공동추진 협력사업	112
<표 5-4> 지역산업네트워크 형성의 추진단계	127

- 그림 목 차 -

〈그림 4-1〉 충청권경제협의회 출범 사실	49
〈그림 4-2〉 충청권경제협의회 차원의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	50
〈그림 4-3〉 충청권경제협의회에 대한 정보수집 매체	51
〈그림 4-4〉 충청권경제협의회에 대한 시민홍보의 필요성	52
〈그림 4-5〉 충청권경제협의회 및 경제협력성과 홍보매체수단	53
〈그림 4-6〉 충청권경제협의회 출범 배경 및 당위성에 관한 동감	54
〈그림 4-7〉 충청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55
〈그림 4-8〉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족되기 전 충청권의 경제협력 성과	57
〈그림 4-9〉 향후 충청권경제협의회를 통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전망	58
〈그림 4-10〉 충청권경제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59
〈그림 4-11〉 현 시점의 충청권 경제협의회 활성화 저해요인	61
〈그림 4-12〉 충청권경제협의회 사무국의 적합한 설치형태 및 장소	62
〈그림 4-13〉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족 시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	63
〈그림 4-14〉 1) 문항 외의 중요한 지역협력 사업	65
〈그림 4-15〉 지역협력 사업 중요도	68
〈그림 4-16〉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	69
〈그림 4-17〉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부진한 분야	70
〈그림 4-18〉 충청권지역 경제협력사업(과제) 발굴 방법	71
〈그림 4-19〉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협력 발전 기여도	72
〈그림 4-20〉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도	73
〈그림 4-21〉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수혜지역	74
〈그림 4-22〉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비수혜 지역	76
〈그림 4-23〉 경제협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78
〈그림 4-24〉 충청권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79
〈그림 4-25〉 응답자의 성별	80

<그림 4-26> 응답자의 연령	81
<그림 4-27>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소속단체의 지역	82
<그림 4-28> 응답자의 직업 또는 소속 단체	83
<그림 4-29> 응답자의 현 직장 종사기간	84
<그림 4-30> 응답자 직장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	85
<그림 4-31> 응답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86
<그림 4-32> 온천 이용 목적	87
<그림 4-33> 온천 관광 횟수	88
<그림 4-34> 온천 관광 형태	89
<그림 4-35> 온천 관광 시 방문기간	90
<그림 4-36> 온천 관광 시 숙박시설 이용형태	91
<그림 4-37> 온천 관광 시 식사방법	92
<그림 4-38> 온천 관광 시 지출비용	93
<그림 4-39> 온천 관광지에 대한 정보습득	94
<그림 4-40> 응답자의 성별	95
<그림 4-41> 응답자의 연령	96
<그림 4-42> 응답자의 직업	97
<그림 4-43> 응답자의 거주 지역	98
<그림 4-44> 온천관광지의 경쟁력	99
<그림 4-45> 온천관광지의 매력성	100
<그림 4-46>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101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경쟁적으로 각종 시책과 메가 이벤트 행사들을 앞 다투어 시행하여 온 결과, 중복과잉투자 및 예산낭용이라는 비효율성과 이로 말미암은 국제경쟁력 상실의 문제를 자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의 모순과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근린지역개발협력 및 통합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충청권에서도 이러한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는바, 특히 대전-충청권 3개 시도광역단체장은 2006 12월 정책협의회를 갖고 충청권 공동발전 5개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이 가동 중에 있다. 이처럼 충청권의 지자체들이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세종”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통신 및 교통망 확충 등 충청권이 전국의 행정 및 교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는 공통된 정책적 마인드가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남의 천안테크노밸리 및 아산-탕정 크리스탈밸리, 충북의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 이미 조성되어 있는 특구와 산업단지를 충청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하드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첨단지식산업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의 배경은 크게 대외적-대내적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 관점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지향하는 빠르고 유연한 국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1세기 들어 금융, 노동, 토지, 경영

노하우 등 생산요소의 이동 범위가 초국경적 글로벌 무대로 광역화되면서 경제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 도시 및 지역의 세계화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정보의 공유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 고속정보화, 지방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반면, 지역간 협력행정이나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경제협력 및 수평적-기능주의적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내적 동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광역화를 언급할 수 있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비대화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흡수통합하게 되고, 생활권·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각종 행정업무상의 상호 협력과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동시설투자 및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예산 및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아우르는 사회전체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문제, 수질 및 대기와 같은 환경문제의 광역성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지역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사안이라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지방경제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려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역간 공동발전을 통한 통합국토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으로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우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공표된 ‘신국토’ 구상에서도 지역간 공동번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문화적 상호협력 및 산업특화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대 지역, 도시 대 도시, 지역 대 도시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프라, 예산 등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정부 들어 새로운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충청권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경제통합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통합, 경제협력에 앞서 충청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광역경제권 공동사업발굴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제 2 장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경제통합의 글로벌 추세

제2절 충청권 경제통합의 필요성

제2장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경제통합의 글로벌 추세

1. 외국의 지역정책

1) 유럽연합(EU)

2007~2013년의 7개년을 기간으로 하는 EU의 지역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낙후도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기준에 따른 3대 지역유형별 목표, EU 전체차원의 지역간, 국가간 협력프로그램별 목표, 농어촌 개발 및 구조조정 목표 등이 혼재되거나 중첩되어 EU 지역정책의 비전이 불분명하고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했던 전기의 목표체계와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 리스본전략의 기초를 구현하기 위해 금기 지역정책에서는 수렴(Convergence), 지역 경쟁력 및 고용(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지역간 협력(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등 새롭게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지역간 협력(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목표는 다른 2대 목표를 지역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적 목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재원은 유럽지역발전기금(ERDF)에서 지원된다. 지역간 협력 분야는 연구, 개발, 지식기반사회 구현, 위험 예방, 통합적 수자원 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소지역간(cross-border) 협력사업은 NUTS 3 수준(기초지자체 수준)의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2007~2013년간 64.4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국가간(transnational) 협력사업은 상이한 국가에 속하는 지역간의 협력사업으로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06년 10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3개 협력지구가 지정되었다. 국가간 협력사업에는 18.3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지역간(inter-regional) 협력사업은 NUTS 2 수준의 모든 지역(268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경험의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4.45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경험의 공유를 위한 사업은 3개의 프로그램 즉 Interact, Urbact, ESPON에 의해 추진된다. Interact는 협력 프로그램 관리 기구들에 대한 지원을 뜻하며, Urbact는 주제별 도시간 네트워크를, ESPON은 지역계획(spatial planning)에 대한 조사·분석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장재홍 (2008)).

2) 영국

영국은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후 1980년대 이래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주던 지역정책이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실업격차의 완화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의 지역정책은 지역의 내생적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고무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생산성, 고용, 소득과 같은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사회결속, 문화적 다양성 등 광범위한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Armstron and Taylor, 2000).

영국은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발전기구를 설립했다. 영국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의 경제발전과 재건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9개의 지역발전기구를 1999년과 2000년(런던)에 설립하였으며, 지역발전기구의 설립이전에 지역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회를 1998년과 1999년에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설립 후 RDA의 감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지역의회가 지역계획협의회(Regional Planning Conference or Body)의 역할을 주도하게 되어 지역계획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15~20년 기간의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담고 있는 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을 책임지게 되었다.

RDA의 핵심적 기능은 5~10년 기간의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입안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전략은 경제개발과 재건, 기업의 효율성, 투자 및 경쟁력 제고, 고용의 촉진,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직능의 향상, 개발 및 적용 등의 내

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RDA의 법정 계획이며, 지역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99년 10월에 처음으로 이 계획문서가 출간되었으며, 3년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지역발전과 재생, 숙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적인 틀이라 할 수 있으며, (광역)지역, 하위지역, 로컬 수준의 조직이나 기구에 의한 지역 내 활동에 대하여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제전략은 정부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또는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지역발전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토대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기구는 연간 경영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정준호, 2008).

3) 프랑스

프랑스는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프랑스 지방분권은 지역개발 주체를 기존의 국가라는 단일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 민간영역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각 주체들을 연계하는 수단으로서 수직적·수평적 협력과 개발협약 체결을 일반화함으로써 지역은 시설들을 입지시키는 곳만이 아닌 흐름들이 교차하는 공간화하고 있다.

협력을 통한 지방 대도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는 대도시권 협력정책과 레지옹간 협력을 통한 광역권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도시권 협력정책은 2004년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가 추진한 정책으로 지방 대도시권을 프랑스 국토를 넘어 유럽의 배후지로 하는 유럽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1960년대 균형거점정책이 지방 8대 대도시들을 파리 집중에 대적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는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파리권을 제외한 프랑스 대도시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여러 측면에서 중심성이 취약하다. 이에 DATAR는 대도시권 지역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협력을 통해 대도시권 전체의 규모와 중심성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4년 공모를 실시하였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총 6개 분야, 즉 업무지구 개발과 같은 경제분야, 공공기능의 중심지, 교통접근성,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및 고등교육,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접수하였다. DATAR는 2005년 6월까지 최종적으로 선정된 15개 대도시권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까지 총 35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이들 대도시권들은 CPER(contrat de Plan Etat-Région, 2007-2013)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레지옹간 협력은 1990년대 말에 도시 간 기능적 보완성과 연계에 기초하여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프랑스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시도들 중 하나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성장과 함께, 지방 대도시들을 지중해 혹은 대서양 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1970년대 수도권 계획에 언급된 바 있다. 1997년 국토개발장관회의는 레지옹 3~4개를 합친 광역권 별로 범정부부처 및 레지옹간 국토개발협의회(MIAAT, Missions interministérielles et interrégionales d'aménagement du territoire)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전 국토에 경제활동과 인구분포에 근거해 남동광역권, 남서광역권, 대서부광역권, 파리광역권, 북부광역권, 대동부광역권 등 총 6개의 광역권이 구획되었다. MIATT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 간의 자발적인 협력기구가 아니라, 레지옹의 국가 임명지사로 구성되는 일종의 중앙정부기구로 가장 큰 역할은 광역권 단위로 유럽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전망하고 장기 전략에 의거하여 주요 개발 분야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구체사업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MIATT는 광역권 구축의 맥락으로 먼저, 유럽연합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경이 열리고, 파리를 제외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둘째,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간 기능 보완성, 상호작용에 토대를 둔 도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토통합, 국제적 위상을 갖는 대도시권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이 필요함을 진단하였으며, 넷째,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성과를 향상시키고, 광역권 내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을 피하고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광역권의 세계적 중심성을 강화함을 꼽고 있다(정옥주, 2006e). MIATT는 2003년 레지옹·유럽지역 간 연구 및 협력개발협의회로 명칭이 변

경되었지만 공간범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정옥주, 2008).

4) 일본

일본은 2006년 「경제성장전략 대강(大綱)」 이후 지역활성화 대책으로 신경제성장전략과 지역활성화 종합플랜을 세우고 지역자원 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기업입지의 촉진을 통한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법)을 창설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역산업 정책 이외에도 지역의 자립과 개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책인 국토계획정책도 대폭 변경하였다. 그 동안의 전국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공장·교육기관 등의 지방분산, 중추·핵심 도시의 성장에 이바지해 왔지만, 지방분권이나 글로벌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전·안심·안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숙사회에 어울리는 계획체계나 목표를 가지는 못했다. 따라서 국토종합개발법을 개정하여 국토형성계획법으로 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대신에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여 신 국토계획법을 수립했다.

신 국토계획법의 핵심적 내용 중에는 블록 단위별로 국가와 해당 지자체들이 상호 제휴·협력하여 수립하는 광역지방계획 제도를 창설하고, 지역의 자율성 존중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실현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광역지방계획은 전국계획 확정 이후 1년 후 작성될 예정이며, 광역별로 광역지방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하고, 국토교통성 대신이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지방계획 수립에 앞서 광역지방계획 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토심의회에 권역부회가 설치되어 2006년 7월에 광역지방계획 구역이 정해졌다. 광역지방계획의 구역은 수도권, 킨키(近畿주)권, 중부권, 동북권, 북륙(北陸)권, 추코쿠(中國)권, 시코쿠(四國)권, 큐슈권으로 구역계획되어 있다. 도입에 대한 법적 기초는 만들어졌으나 아직 정식으로 도주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의 도도부현을 단위로 하는 총 9개의 권역의 블록이 정령(政令)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광역지방계획 수립에는 광역교통이나 산업·경제정책, 고등교육 등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분

야가 많아 도주제는 피해 갈 수 없는 과제이지만,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의 체제에서 각 현이 각각의 행정 목표나 과제, 중점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상호 이해를 조정하여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려워, 기대한 만큼의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박경, 2008).

2. 지역정부간 협력에 관한 해외사례

1)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정부간 협력체제와 협력사업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에 인접한 지방 정부들의 연합체인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는 토지이용, 주택, 환경개선, 그리고 경제개발과 같은 문제들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560여개의 지역계획 대행기구들 중 하나이다.

ABAG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카운티들과 도시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 기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시키고, 미래를 위한 계획과 지방통제기능들을 보호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다 ABAG는 9개의 카운티에 속한 100여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카운티들은 알라메다(Alameda), 콘트라 코스타(Contra Coasta), 마린(Marin), 나파(Nap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샌 마테오(San Mateo), 산타 클라라(Santa Clara), 솔라노(Solano), 그리고 소노마(Sonoma) 카운티(County)들이다. 이곳에는 약 7백만명의 사람들이 20,968km²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곳의 미래 교통망은 적절한지, 어떻게 대기와 수질오염을 통제할 것이며, 어떻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것인지,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수많은 정부기구와 민간기구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간의 협력된 행동 없이는 쉽게 조정되거나 달성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ABAG의 중요 기능들 중 하나는 타협과 화해를 통해 지방의 차이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과 공공의 정보제공 활동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

는 계획과 정책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ABAG는 항만지역 지방정부 연합체로서 지역내 지방정부들 간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 광범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1년에 창설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항만 지역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발정책들과 경제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등 개발 지역사회들이 요구하는 공적 서비스들에 대한 광범위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수한 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었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ABAG가 설립되게 된다.

ABAG의 주요 기능은 회원 자치단체간 협력하에서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이 표방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ABAG는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들이 상호 협력하여 개별 정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시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고자 인접한 정부들이 공동으로 하부기관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자원자원, 교통, 주택,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신동호 외, 2006).

2) 캐나다 밴쿠버 광역지역 정부 간 협력체제와 협력사업

GVRD(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는 밴쿠버 광역도시권지역으로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연합체이다. 1967년에 설립된 GVRD는 18개의 지방도시들과 3개(법인조직형태가 아니면서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혼합형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밴쿠버 지역은 주(州) 인구의 1/2이 조금 넘는 2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지방정부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해결대안들이 1886년에 도시간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20년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 1911년 밴쿠버에 인접해 있는 지방도시들로서 하수처리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포인트 크레이, 밴쿠버 남부지역, 그리고 버나비(Burnaby)와 같은 도시들은 지역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되었고, “협동적 대응체제의 진

행”이라는 명제 아래 연구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1914년에 와서는 지방정부의 하수국과 배수처리국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지역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지닌 기구들은 그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1926년에 설립된 벤쿠버 수자원국(Great Vancouver Water District; GVWD)과 1936-1948년의 보건의료국이 그 대표적인 기구들이다. 1948년에는 로워 메인랜드 지역계획국(Lower Mainland Regional Planning Board; LMRPD)이 창설되었으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역 기구들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벤쿠버 전체를 위한 지역지구 시스템도 1965-67년에 만들어지게 된다.

GVRD 내의 지역들은 기능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기능성 위임된 지역의 일반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의료관리기능 까지도 포함한다. 벤쿠버 지역 내의 위임된 기능들로서는 수자원국과 오폐수처리국의 책임까지도 포함된다. 둘째로, 78개의 자발적인 기능들이 존재한다. GVRDso 각 지구는 기능 수행에 있거나 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 기능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GVRD의 기능 또는 제공 서비스들은 크게 11개 분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GVRD가 제공하고 있는 11개 서비스들은 각각의 서비스별로 세부계획들과 추진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 예로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 수립은 ‘살만한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 마련과 구역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한 교통계획 수립, 지역경제정책 수립 등과 함께 지역별 성장 관리를 위한 인구 및 주거 밀도 조사, 지역별 특성 파악, 각종 통계자료 구축 및 활용, 보고서 발간, 지도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신동호 외, 2006).

제2절 충청권 경제통합의 필요성

1. 충청권 지역여건

1) 인구규모 및 면적

2006년 기준 충청권의 인구는 총 499만 명으로, 이 중 대전이 1,476천명, 충북이 1,512천명, 그리고 충남이 2,001천명으로 전국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권 면적은 전국대비 16.6%로 대전 0.5%, 충북 7.5%, 충남 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충청권 인구규모

(단위: 명,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47,353,519	47,615,132	47,847,227	48,082,163	47,294,143
충청권	4,795,350 (10.13)	4,799,734 (10.08)	4,807,638 (10.04)	4,835,601 (10.05)	4,848,366 (10.04)
대전	1,417,873 (2.99)	1,433,881 (3.01)	1,453,994 (3.04)	1,463,767 (3.04)	1,458,269 (3.02)
충북	1,477,090 (3.17)	1,495,165 (3.14)	1,490,142 (3.11)	1,490,344 (3.10)	1,487,359 (3.08)
충남	1,878,387 (3.97)	1,870,688 (3.93)	1,863,502 (3.89)	1,881,490 (3.91)	1,902,938 (3.94)

자료: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재정리

2) 지역내 총생산

충청권 지역내 총생산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98조 250억으로 전국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19조 4550억, 충북은 27조 4950억, 충남은 51조 750억이며, 충청권의 GRDP는 연차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교

(단위: 10억원)

구분	1998	2000	2002	2004	2006
전국	479,824	577,971	685,946	786,362	857,444
수도권	221,734 (46.2)	276,516 (47.8)	334,248 (48.7)	372,262 (47.3)	409,292 (47.7)
충청권	50,287 (10.5)	62,043 (10.7)	71,940 (10.5)	87,204 (11.1)	98,025 (11.4)
대전	11,423	13,559	16,046	18,550	19,455
충북	16,074	19,521	21,500	25,419	27,495
충남	22,790	28,963	34,395	43,236	51,075

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3) 산업구조

산업구조는 대전의 경우 서비스업 등 기타부문이 82.8%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은 17.0%인 반면, 충북과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각각 39.3%, 45.9%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3〉 충청권 지역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

(단위: %)

구분	대전		충북		충남	
	2000	2006	2000	2006	2000	2006
1차산업	0.5	0.3	9.3	6.2	12.8	8.5
2차산업	21.3	21.5	39.9	44.8	38.6	47.4
3차산업	78.2	78.2	50.8	49.0	48.7	44.1

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4) 지역의 전략산업

충청권 지역의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전략산업 4대분야는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산업이며,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 전지산업,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부품, 첨단문화, 농·축산 바이오 등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다. 충청권에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은 IT산업과 BT산업으로 특징지워지며, 산업간 기술적 연계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4> 충청권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주요사업	
충남	전자정보 기기산업	·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 세계 크리스탈 교역전 개최
	자동차 부품산업	· 첨단자동차부품 R&D집적화 센터 · 미래형 첨단자동차개발사업 지원	· 첨단자동차부품기술 연구개발사업
	첨단문화 산업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설립 · 영상미디어사업화 지원센터	· 첨단 문화콘텐츠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농축산 바이오산업	· 바이오산학협력단 · 인삼약초바이오식품 사업화지원센터	·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	· 바이오신약/장기, 기능성식품	· 바이오통합지원사업
	반도체산업	· 시스템 IC기술개발사업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육성
	이동통신 산업	· 유비쿼터스네트워크 기술개발	· 이동통신단말기용 S/W지원
	차세대 전자산업	· 전지소재부품개발	· 전지제조기술개발
대전	정보통신	· IT전용벤처직접타운 건립 · 대덕밸리소프트타운 운영사업 · 대덕밸리소프트타운 마케팅지원사업 · u-IT839시장창출지원사업 · IT분야 선도기업지원사업 · 대덕 IT 포럼운영 · 대덕밸리 IT협력 네트워크사업 · IT CEO 전략커뮤니티 구축운영사업 · 국내외 유명인증취득지원사업 · 대전 특화 IT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 · 국내외 협력마케팅 지원사업 · 첨단기술사업화시범사업	· 임베디드 S/W시장진출 시범사업 · 대전지역 IT/SW육성전략 및 로드맵 구축사업 ·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위탁교육 · IT산업 Global 유통 및 마케팅 · Digital, HD영상 및 2D, 3D콘텐츠 개발지원 · 대덕연구단지 영상타운 건립 · DMB 시범방송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이동통신 클러스터 조성 · 인터넷 실시간 게임개발 지원 · 전자상거래 및 웹기반 플랫폼 개발지원 · 평판 디스플레이 센터 건립 · RFID/Ubiquitous 지원사업
	생물	· 바이오 벤처타운 조성 · 암 r&d 전문센터 사업 · 바이오산업 선진화지원센터 설립 · 바이오 글로벌 지원센터 설립 · 우수약품 인증지원센터 설립 · 생물산업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생물산업전문대학원설립 · 게놈시스템 구축을 통한 분자표적사업 · 나노바이오 정보전자 연구센터 설립 · 건강기능성식품 효능 및 안전성평가센터 설립
	첨단부품 및 소재	· 나노 종합fab센터 구축 · 에너지/신소재 평가분석센터 설립 · 신소재부품 생산지역업체 글로벌마케팅지원 · 차세대전지 신소재부품 성능분석평가 사업 · 차세대 전지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위탁 · 차세대전지/신소재 부품 생산시설 지원 사업	· 신소재부품산업 집적단지 조성 · 에너지/신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 소재평가 및 분석센터 건립 · 차세대전지, 신소재 부품기술 연구개발 지원 · 소재평가 및 분석센터건립 · 나노 SoC 개발센터 구축
	메카트로닉스	· 지능 로봇사업화센터 · 지능로봇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실시 · 지능형로봇 표준화 및 공동마케팅 구축사업	· 국가전략로봇개발 기술연계 사업화 · 전통/첨단기술융합 지원시스템 구축

5) 산업집적 시설

충청권에는 국가산업단지 4개소와 지방산업단지 48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88,791천㎡에 달한다. 충청권의 52개 산업단지중 20여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내에 입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내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정보기기산업과 바이오 산업, 벤처기업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4년제 대학이 대전과 천안, 아산, 청주시에 밀집해 있어 고급인력과 기술을 상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6)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기초한 창업기업으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대표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005년 충청권 벤처기업은 총 891개이며, 대전이 410개로 46%를 차지하고, 충남이 257개로 28.8%, 충북이 224개로 25.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이 17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제조업 108개,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83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82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 74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충청권 지역별 클러스터

구분	핵심거점	주요내용
대전	대전 (대덕특구)	· 대덕특구 중심 생물산업(BT), 정보통신(IT), 나노기술(NT)과 관련된 기술개발형 산업클러스터 형성 · 벤처 및 첨단기술생산업체 중심의 Fusion형 첨단산업 육성
충북	오창·오송 (바이오밸리)	· 청주 중심의 바이오, 반도체, 음향기기 관련 첨단기술생산-연계형 산업클러스터 형성 · 오송지역 중심의 의료보건산업 기술개발과 생산거점 조성
충남	천안·아산 (천안밸리)	·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디스플레이, 영상미디어 관련 첨단기술-생산연계형 산업클러스터 형성 · 전자·정보기기 등 IT산업 및 동물바이오산업 특화

<표2-6> 충청권 강·약점

구분	강점	약점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행정, 교육, 국방의 중핵도시 · 최고의 연구인력 보유/ 기술협력 용이 · 차세대 융합기술(IT, BT, NT) 능력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인프라 미흡, 제조업 기반취약 · 지역 선도기업(대기업) 부재 · 연구성과 사업화, 벤처캐피탈 취약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 IT분야의 집적기반 구축 · 물류인프라 구축 양호 · 과학기술과 산업생산체계 연계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지원기관 부족 · 창의적 벤처기업 부족 ·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외부역량 필요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등 대기업 소재, 당진항 등 무역항 발전 · 탕정중심의 디스플레이산업 발달 · 군장클러스터 중심의 자동차산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 및 금융환경 취약 · 정주 및 도시기반시설 취약 · 혁신창업형 지역혁신기반 취약

2. 충청권 경제의 주요 특징

1) 개방형 경제구조

충청권 경제는 6개 광역 경제권역 중 타 지역과 상호 의존도가 가장 높아 개방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49.1%는 수출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고, 충청지역에서 사용된 제품 및 서비스도 48%는 수입되거나 타지역에서 이입되고 있으며, 충청지역 민간소비액 중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 즉 자기지역공급률도 60.7%에 불과하다.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충청지역이 타지역 생산을 유발하는 정도를 보면 충청지역 최종수요 증가가 유발하는 생산의 40.3%는 충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충청지역 생산의 타지역 최종수요 의존율은 46.2% 수준이다.

충청권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이출액 중 수도권에의 판매 비중이 57.6%, 타 지역에서 충청권으로 이입되는 제품 및 서비스 중 수도권 비중이 53.5%로 타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2) 일부 주력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미흡

충청지역의 주력산업을 업종별 배출액을 기준으로 추려보면 제조업에서는 화학 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음식료품, 수송장비 등이 있으며, 비제조업에서는 건설, 교육 및 보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이다.

이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평가해 보면, 음식료품, 건설, 교육 및 보건 등은 대체로 전산업 평균치를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면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의 업종은 지역내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정도가 평균치를 하회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취업유발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소재·부품 등의 역외의존도가 높은 데 주로 기인하여 전후방 연쇄효과도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부가가치 또는 취업을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낮은 생산성

충청권의 산업별 취업구조는 서비스업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농림어업과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9.7%p 낮은 상황이며, 충청권 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¹⁾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충청권 경제통합 추진의 필요성

1) 지역산업연관표 및 전국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를 고용표상의 취업자수로 나누어 계산

충청권 경제통합은 세계화·지방화·정보화·환경중시 가치관 등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국교역의 증대, 서해안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건설과 수도권 기능분산 등 외부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충청권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국토중심지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충청권은 도로, 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중간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고속전철 건설, 초고속정보망의 구축, 청구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지역간 물류유통의 주요결절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토중심지의 기능수행이 기대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 중추기능의 집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기능의 계획적·체계적인 수용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산업수도화에 따른 첨단·지식산업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충청권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R&D특구를 중심으로 고도의 두뇌집단과 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천안, 청주를 중심으로 벤처기술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지대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은 향후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도입, 전문고급두뇌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전문인력의 육성, 과학과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황대경제권의 부상으로 충청권의 위상이 변화될 전망이다. 충청권은 지리적인 위치와 서해안 거점항만 조성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주요한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교역과 교류증대는 서해안의 역할증대와 함께 충청권은 환황해권의 소비·투자 잠재력을 흡수하고,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거점(Hub)으로서 부각될 것이다.

넷째, 정보·고속화의 진전과 광역적 정주체계가 등장으로 도시중심의 경제·사회활동의 광역화는 광역적 교통망 및 공급처리시설의 건설과 각종 광역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광역행정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문화 및 환경적 욕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21세기

지역개발수요는 지역문화 및 여가활동 촉진, 환경적 질적 수준개선, 주거환경 등 삶의 질 측면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유로운 삶과 문화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충청권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함께 역동적인 산업기반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제 3 장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충청권

제1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제2절 충청권 경제협력 추진상황

제3장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충청권

제1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1. 여건의 변화 및 시대적 요구

오늘날의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세계각국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광역화는 행정구역 개편 또는 광역 경제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본은 47개 都道附縣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프랑스는 96개 데파르망을 22개 레지옹을 거쳐 6개의 광역권으로, 독일은 16개주를 9개주로,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도입하였다. 분권화는 단순 지방자치를 넘어 準연방국가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본은 지방주권 성격을 道州制 도입 및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광역자치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각에서의 지역경쟁력 제고보다는 지역간 키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고, 100년 전의 행정구역에 고착되어 소지역 이기주의에의 집착, 행·재정적 권한의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등 전국이 이미 만나질 생활권화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광역화 및 분권화를 통한 시대변화 반영에 미흡한 실정이다.

2.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1) 균형발전정책 평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혁신·행복·기업도시 건설, 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각종 시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했으며 784.6km²(2.4억평) 규

모에 SOC를 포함하여 100조원의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 연계시키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구조가 격화, 행정구역간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였다. 또한 중앙주도의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시켰다.

2)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함축해 볼 수 있다.

첫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을 구축하여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지역을 창조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제고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및 각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표 3-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비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 지역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성장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 계획·개발권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책 발전·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3.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1) 전국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1) 기초생활권 추진방안

기초생활권은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도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지역연고자원의 2·3차산업 융합 등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광역권과 기초생활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와 소도시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다.

추진주체는 해당지역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은 이를 재정으로 뒷받침하며, 부처별 분산·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폐합하고 포괄보조금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표 3-2> 수도권 성장 잠재력 극대화 전략

기본방향	■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
기초생활권	○ 162개 시·군 단위의 지역 개발
광역경제권	○ 16개 시·도 ⇨ 7개(5+2)로 묶어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개 초광역권 개발

(2) 광역경제권 추진방안

광역경제권은 권역별 역사·문화적 동질성으로 지역간 협력이 용이하고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된 5+2로 설정하였다. 광역경제권 추진은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단계부터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중이다. 5+2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과 사업 성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제도화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간 광역연계사업 협의·조정 등을 위해서는 추진기구는 초기단계 시·도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우녕하되, 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지원단 설치를 검토하고 성과를 통해 의결·집행기능을 보유한 기구로 법제화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광역경제권의 정의, 고아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시행, 광역경제권 추진 기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재정지원 등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된다. 재정지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사업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비,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되고,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7.8조원)는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3) 초광역개발권 추진방안

정부는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초광역개발권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주도로 추진하되,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과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는 교통망, 단지 조성 등 초광역권 인프라 구축에 중앙예산과 지방비 등 공공재원을, 관광, 레저 등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구용역,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권역설정, 권역별 발전방안, 추진체계, 자원조달 방안 등은 연구용역,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표 3-3> 초광역권 개발 추진 방향

초광역개발권	발전 비전
남해안 선벨트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물류·관광중심지 육성
서해안 선벨트	중국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 IT, 자동차, 철강, 물류 등 주력산업중심 융합산업 육성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및 환동해권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
남북교류·접경벨트	평화정착·교류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 단지 개발 및 생태 환경 자원 보존 등

4. 지역경쟁력 제고 지원방안

1) 공간 구조별 지원전략

정부는 기초생활권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통합하고 맞춤형·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도서·접경·농산어촌·중산도시 등을 유형별로 재분류 하여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기본 인프라를 확충해 성장을 촉진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도시내 낙후지역은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도심활력을 증진시키고, 사양산업 집적지 등은 대체산업을 육

성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원내용에 차별화를 둘 예정이다.

광역경제권별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도로 新성장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조기에 착공한 뒤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재정투자와 함께 세제지원 및 과감한 규제개혁을 병행할 계획이다. 신성장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성장 거점지역 지정을 통해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등 지원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3대 해안벨트 및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초광역권 구축을 지역의견 수렴과 중장기 국토정책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지역 전문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발굴할 계획인 핵심프로젝트는 정부 역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2) 세부 지원방안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과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광역발전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동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정부 예산 지원을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시도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광역권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균특회계를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운용규모는 타 회계 사업 이관, 신규재원 발굴등을 통해 7.6조원('08년기준)을 9조원 내외로 확대시키고 지역주도의 개발지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포괄보조 방식의 「지역계정」을 신설한다. 이를 4조원 내의 규모로 운영하여 성장촉진지역을 육성하고 생산기반확충 등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현행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해 사업군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별 추진사업을 설계하도록 하며, 사업성과

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등 Feedback을 강화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제고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광역계정」을 설치해 5조원 내외로 운용하여 광역경제권 전략산업과 거점대학 육성, 지역·광역SOC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고, 광역계정은 지역주도의 개발계획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 세제 지원방안

정부는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자체 재정여건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고, 인센티브는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 자율편성과 한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배분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역시 추진되고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일몰시한('09년)을 연장시키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투위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조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내 개발사업자 조세감면 추가 및 감면대상 관광사업 업종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4)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윈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의제 확대, 토지이용 지역·지구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권한위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윈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권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 및 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시·도 경제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이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확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유가, 지역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지역금융 활성화, 지역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5.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1)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전략

정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체제 확립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시책으로,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해당산업의 글로벌화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하여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물류 SOC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규제 완화는 국가산단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노후산단 재개발 등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완화 역점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광역경제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초광역개발권 구상과 기초생활권 추진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기능적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2) 부처별 주요내용

(1) 국가균형위원회

국가균형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을 통해 선도사업·인력·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5+2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4> 5+2 권역별 특화발전 비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충북, 충남)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호남권(전북, 전남)	21c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강원권(강원)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 산업의 프론티어
대경권(경북)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동남권(경남)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제주권(제주)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 자유도시

수도권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세계 초일류 지향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계획적·질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성장관리체제구축을,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서, 대덕, 행복도시, 천안·아산, 오창·오송 중심의 첨단 기술형 광역 성장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대한민국 R&D 허브 및 동북아의 IT·BT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발전비전으로 삼고 있다.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해양 문화·레저 관광벨트 개발, 글로벌 신성장거점을 개발하고 중국시장 연계 산업·물류거점 개발, 저탄소·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며,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주력 기간산업 벨트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환태평양 최고수준의 물류·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며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 구축을 발전비전으로 계획하였다.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시대를 맞아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융·복합 클러스터를 형성 촉진하고 역사 및 전통문화유산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벨트하며,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로서 내륙과 해안 거점 및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기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에너지산업 및 바이오·메디컬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

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서, 고품격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 등 기반을 확충시킬 예정이다.

5+2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 외에도 기초생활권을 162개 시군을 대상(사·도 협의 균형위 심의)으로 중신도시-농산어촌-특수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농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성장촉진, 신성장거점, 도시활력증진 등 4개지역 포괄보조금 사업을 재편을 추진하고,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장으로 산업, 문화, 관광, 인프라 등이 융합된 초광역개발권 형성을 촉진시키고, 7. 21발표 4대초광역벨트 외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권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표 3-5> 국가균형위원회-5+2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초일류 지향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지 육성 ○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계획적·질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성장관리체제 구축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 행복도시, 천안·아산, 오창·오송 중심 첨단기술형 광역 성장벨트 형성 촉진 ○ 대한민국 R&D 허브 및 동북아의 IT·BT 산업의 중심지로 발스런
호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문화·레저 관광벨트 개발, 글로벌 신성장거점 개발 ○ 중국시장 연계 산업·물류거점 개발, 저탄소·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동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기nant업벨트 고부가가치화 촉진, 환태평양 최고수준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 ○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 구축
대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융·복합 클러스터 형성 촉진 ○ 역사 및 전통문화유산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벨트 개발
강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과 해안 거점 및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기간 교통망 확충 ○ 에너지산업 및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산업 육성
제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격 관광레저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 등 기반 확충

(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견인할 재정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으로는 광역권별 선도산업 및 인재육성, 성장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권역별 선도산업으로 1~2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해 해당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여 5년간 2조 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개 신규 국가산단(대구, 포항, 서천, 구미, 광주·전남)을 개발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화 연계를 위한 집적단지 개발, 새만금과 여수EXPO를 통해 서남해안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를 통해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시키는 등 성장거점을 육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과 순환망의 구축, 거점도시간 신속한 연결이 가능한 철도망의 구축, 세계 주요도시와 광역간을 연계하는 공·항만의 건설, 해양내륙 관광을 기반으로 광역권별 수요에 맞는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광역기반시설을 확충시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해선 연계 광역전철망 신설, 인천 도시철도 확충, 수도권 북부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은 자족형 행복도시의 건설, 거점도시간 신교통수단 구축, 고속도로 건설(제2경부, 제2서해안), 서해선 철도, 동서 4축 고속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호남권은 새만금을 조기 개발, 여수 EXPO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동남권은 부산신항 및 울산산단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부산항~광양항간 복선전철화, 동서8축 확장,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마산~거제 연륙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경권은 동서5축+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동해고속도로 확충,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강원권은 동서+동해고속도로 건설,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 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제주 항공운송능력을 확충시켜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프로젝트는 적기 완공이 가능토록 국책사업으로 관리하고 '09 예산부터 본격 지원하고, 국가재정 운용계획('09-'13)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며, 토지공사에 토지은행(Land Bank)을 설치해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SOC 및 산단 용지를 비축하여 적기에 공급하는 등 민간자본과 공기업 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표 3-6> 기획재정부-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수도권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선 연계 광역전철망 신설, 인천 도시철도 확충, 수도권 북부발전 도모
충청권	○ 자족형 행복도시 건설, 거점도시간 신교통수단 구축, 고속도로 건설(제2경부, 제2서해안), 서해안 철도, 동서 4축 고속도로 확충
호남권	○ 새만금 조기 개발, 여수 EXPO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 호남 고속철도 건설,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
동남권	○ 부산신항 및 울산산단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부산항~광양항간 복선전철화, 동서8축 확장,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마산~거제 연륙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
대경권	○ 동서5축+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동해고속도로 확충,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
강원권	○ 동서+동해고속도로 건설,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제주권	○ 서귀포 크루즈항, 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권 선도사업 분야 전공개설 및 인프라 구축 우수대학을 1~2개 선정하고 지역주도 거점대학을 선정·추천하여 관련기업체와 광역권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전략적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하고, 대학당 50억원 내외 매년 1천억원을 투입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선도산업 분야로 자원을 집중하고 대학의 브랜드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 등을 통해 엄격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청권), 울산과기대(동남권), 포항공대(대경권) 등 우수 이공계 대학을 선도산업과 연계시켜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재정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광역권 우수 인력양성을 뒷받침하고 '09년부터 누리사업·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09년 교육역량 강화산업의 예산을 증액해 지방대와 지방전문대에 3,300억원을 지원하고 취업률 등 교육성도가 탁월한 소수대학 지원으로 대학간 경쟁을 촉진

시킬 계획이다. 또한 재정지원 방식도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에 의한 포물러 방식으로 전면개편하여 대학에 예산을 총액으로 교부하여 자율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며,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세계를 잇는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추어 지방공항과 거점항만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출연(연)과의 학연협력, 세계수준의 연구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출연(연)과 지방대학의 공동책임 특화전문대학원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지역의 우수과학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전공을 개설하고 해외 저명학자 유치 및 국제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지방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배양(’08~’12, 총 2,000억원 지원)시킬 계획이다.

(4)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비전을 제시하였다. 지역정책의 중점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로 전환해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성장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능한 선도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후방산업이 동반발전하여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키고, 타권역 및 세계시장과 경쟁·협력하는 개방적 경제권을 지향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 및 전략으로 삼고 있다.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은 수도권은 지식서비스, 강원권은 의료 및 관광,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및 光소재, 대경권은 에너지 및 이동통신, 동남권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제주권은 물산업 및 관광 레저를 후보로 예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역진흥사업에 5년간(’08~’12) 총 5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H/Wm 축을 지양하면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권의 자율적인 합의 및 주도적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광역권이 선도산업 분야에서 기업활동에 최적지가 되도록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정책역량의 결집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가 신성장동력이 제시된 후, 필요시 일부 조정하여 광역권별 선도 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 기반구축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먼저 산업단지 공급확대 및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하여 산업단지 개발시 입지제한지역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타당성 검토결과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지방노후산업단지 도로,, 주차장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로 도시계획 체계를 개선하고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여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장기적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지역·지구 유형별로 통폐합 해 지정실적이 없는 109개 구역 폐지를 추진하고, 정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이양할 예정이다. 셋째로 광역경제권 핵심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시켜 광역경제권 발전 긴요사업의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도 운영을 개선하여 非點 오염권 저감대책을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수립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개발 허용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업을 위해 대부된 국유지내에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며, 대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 등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도 수도권 손재 본사오나 공장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 타지역으로 이전시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개발시 자회사계열회사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토지로 인정하고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를 위해 지방이전기업 직접개발시 최소 면적 기준을 330㎡에서 220만㎡로 축소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인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에 ‘자체구입한 연구시설투자비 및 장비구입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의 임대비용만 인정하고 있다.

<표 3-7>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수도권	1.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과주-양평-오산-인천) 2. 원시-소사-대곡 복선 전철 3. 인천지하철 2호선
충청권	4.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5.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6.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7.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8. 동서4축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
호남권	9. 새만금개발(새만금 개발,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10.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11.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12. 호남고속철도 13. 광주외곽순환도로
동남권	14. 경전선 복선전철(무산-마산, 진주-광양) 15.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16. 동북아제2허브공항 17. 마산-거제 연육교 18. 부산외곽순환도로
대경권	19.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20.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21.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22.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조성 23. 대구외곽순환도로
강원권	24.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25.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26. 원주-강릉 철도 27.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
제주권	28. 서귀포 크루즈항 29. 제주해양과학관 30. 영어교육도시

제2절 충청권 경제협력 추진상황

1. 충청권경제협의회 추진경위

충청권경제협의회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06년 6월에 충청권 발전방안 공동노력에 합의하면서 추진되었다. 충청권 경제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하였고, 충청권 3개 시도 국장회의(1회) 및 과장회의(4회)가 개최되었으며, 충청권경제협의회는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경제단체장 등 민간경제주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제협의회는 정책결정기구로 시도별 경제전문가 및 유관단체장이 각 15명으로 총 45명으로 상공회의소 회장, 산업단지 협의회장, 발전연구원장, TP원장, 시도 의원, 건설협회 시(도)회장, 지역산업진흥원장, 경제전문 교수, 벤처연합회장, 기업(경제)인, 시도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경제호라성화 공동발전방안을 연구·협의 및 자문하고 필요시 정부에 건의하며, 주요경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 및 장·단기 협력사업 발굴을 공동추진하며, 그 밖에 시도의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책 결정을 한다. 정례회의(년 2회) 및 필요에 의한 수시회의로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안건발굴 및 검토 기구로 시도별 경제국장 및 단체임원급이 각 10명으로 총 30명으로 시도 경제관련 과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산업기획단 책임연구원, 벤처협의 임원, 이업종교류 연합회 임원, 산업단지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임원, 시도 건설협회 임원, 금융권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 실무협의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은 정책집행기구로 시도별 공무원 및 발전연구원에서 각 3명으로 총 9명이며 3개 시도 경제정책과(발전연구원)를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에 대해 3개 시도지사가 '07년 8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충청권 경제협의회 위원위촉(45명) 및 창립총회를 '07년 9월에 개최하여 경제협의회 임원을 선출하고,, 경제협의회운영규약을 확정하였다.

충청권 경제협의회 관계관 회의가 '07년 11월 개최된 데 이어 '08년 1월에는 충청권 경제협의회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08년 2월에 제2차 충청권 경제협의회가, '08년 4월 제2차 충청권경제협의회 실무협의회가, '08년 9월 제3차 충청권 경제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표 3-8>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 3개 시도지사 협약서

우리 충청권 3개 시·도는 21세기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발전과 공동도약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충청권 시·도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실천이 용이하고 협력의 효과가 큰 분야부터 우선 추진한다.
2. 충청권 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4.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제시한 공동사업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실무 협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5. 위의 합의사항을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해 충청권 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을 별도 구성·운영한다.

2. 충청권경제협의회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충청권경제협의회는 행정구역의 범위를 초월한 기업인, 경제단체 중심의 경제협의체로, 경제협의회, 실무협의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기 추진사업, 단기적 사업, 중장기적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충청권 각 시·도의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재원을 공동부담하고 공동투자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 광역경제활성화 공동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충청권 광역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별 인적네트워크와 행정도시와 연계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

축해야 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선도사업 추진, 광역클러스터 구축, 범위 확대 등 지원을 강화시켜야 한다. 해외사무소 활용 및 해외수출 마케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교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공동대응해야 할 것이다.

3. 충청권경제협의회 운영현황

충청권경제협의회는 주요협회사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공동 건의와 청주국제공항 이용 활성화 공동 추진 등이며, 위원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9〉 충청권경제협의회 위원구성 현황

구분	합계	경제단체	기업인	교수	의회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경제협의회	46	14	11	6	3	3	9
실무협의회	30	20	1(금융)	-	-	3	6

'07년 9월의 충청권 경제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시·도지사가 고문으로 참여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시도별 1년씩 윤번제로 운영하는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규약을 원안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충청권경제협의회 창립총회 후 개최된 '07년 11월 충청권경제협의회 관계관 회의에서는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시기와 실무협의회 참여 단체에 합의하였고, 충청권 공동사업 발굴은 선택과 집중으로 작은 것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08년 1월 개최된 충청권 실무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정상운영시까지 경제통상국장이 실무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회의시기는 분기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확정했다. 그 외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충청권이 함께 모여 충청권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기존사업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재검토 하였다.

제2차 충청권경제협의회는 '08년 2월 개최되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공조,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5+2 고아역경제권 공동 대응전략,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방안, 충청권 수출지원시책 공동 추진, 충청권 관광 공동 홍보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충청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08년 4월에 개최된 제2차 충청권실무협의회에서는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에 있어 3개 시도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디자인 공동지원시스템과 본사(공장)가 충청권 시도간 분리된 업체를 현장방문하여 충청권에 분리된 기업을 애로지원 하였으며, 추석 및 설 명절에 지역상품 공동 마케팅을 정부대전청사 등에서 열고 금산 인삼축지, 직지 축제 등 각종 축제시 공동 홍보함으로써 충청권 비경합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시도별 특화노선 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항공사와 협의하여 국제항공수요 대비 국제노선 다변화에 공동 노력하고, 대형항공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 확장, 화물터미널, 창고건설 및 특수화물 취급인력 조기 확충, 면세점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수입 농산물 등 검역절차 간소화 등 공항시설 확충사업을 정부(공항공사)에 건의·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다.

4.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전방안

충청권경제협의회는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협의체라는 공동인식을 강화하여 회의 운영 및 공동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원칙에는 동의하나 이행에는 이견이 도출되므로 3개 시도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충청권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비예산 사업, 시도별 독자추진이 가능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경제협의회 상정 안건은 실무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해 공동사업 발굴 등 실무협회가 가능하도록 구성원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등 충청권의 공조가 필요하다. '08년 8월 지식경제부에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을 3개 사업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결정된 사업이 9월중 기 제

출 3개 사업과는 별개로 권역별 공무원 및 TP회의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을 발굴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전, 충남·북 개별사업을 탈피해 충청권 공동발전 사업선정이 중요하며, 지자체 의견수렴, 협의 및 성장동력사업 반영 등을 거쳐 권역별 선도 산업을 확정해야 한다.

제 4 장

충청권 경제협력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충청권 경제협력 설문분석

제2절 온천관광협력 설문분석

제3절 실증분석의 시사점: 문제점 및 협력방향

제4장 충청권 경제협력에 관한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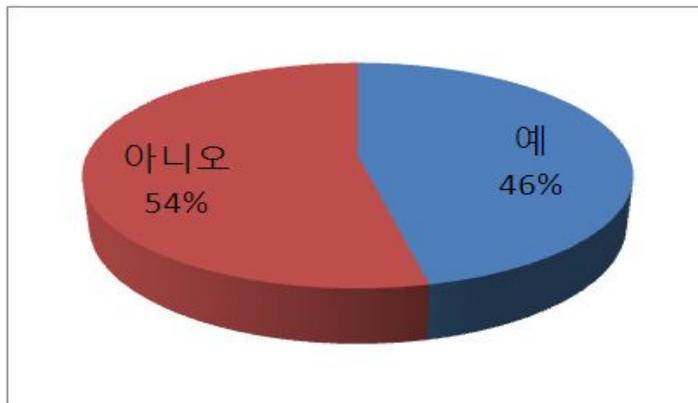
제1절 충청권 경제협력 설문분석

1. 충청권경제협의체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

1) 선생님께서는 충청권경제협의체의 출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충청권경제협의체 출범한 사실에 대하여 총 695명 중 323명(46.5%)은 알고 있었으나 372명(54%)은 모르고 있어 아는 사람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충청권경제협의체 출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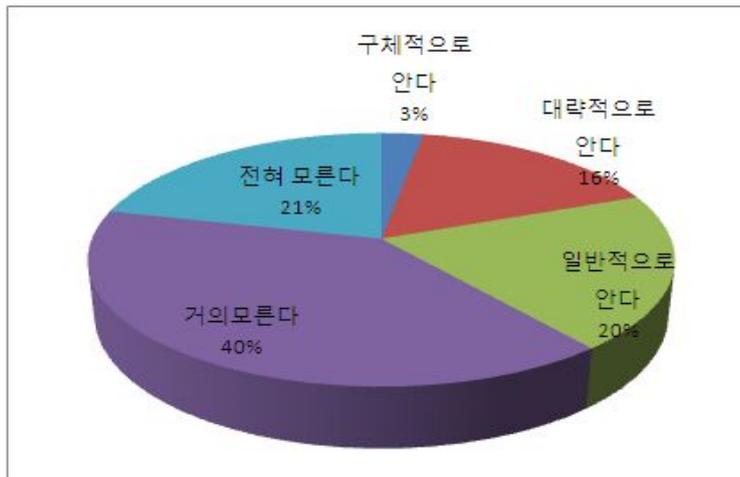
<표 4-1> 충청권경제협의체 출범 사실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예	347	46.5
아니오	399	53.5
전 체	746	100.0

2) 충청권경제협의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충청권경제협의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편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모르고 있다가 21.3%,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다 19.9% 순으로 많이 응답했으며 반면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충청권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때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충청권경제협의체의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 4-2> 충청권경제협의체 차원의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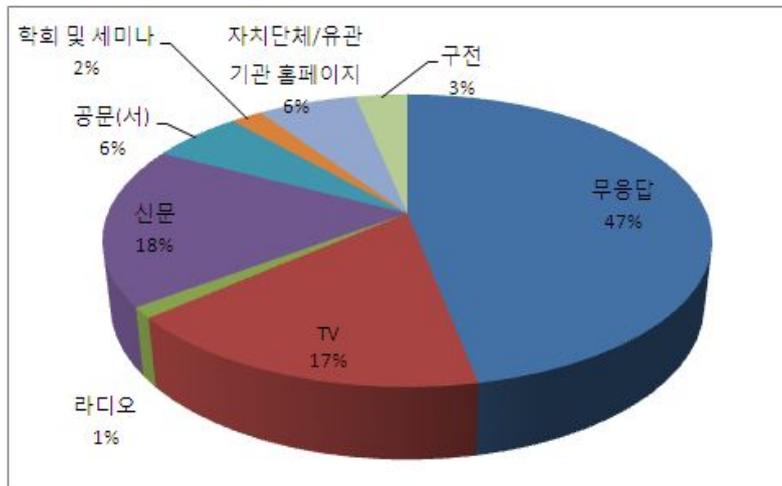
<표 4-2> 충청권경제협의체 차원의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20	2.7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123	16.5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다.	149	19.9
거의 모르는 편이다.	295	39.6
전혀 모른다	159	21.3
전 체	746	100.0

3) 충청권경제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어떻게)접하게 되셨습니까?

충청권경제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신문(17.7%), TV(16.8%), 자치단체/유관기관 홈페이지(6.3%)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신문에서 충청권경제협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충청권경제협의회에 대한 정보수집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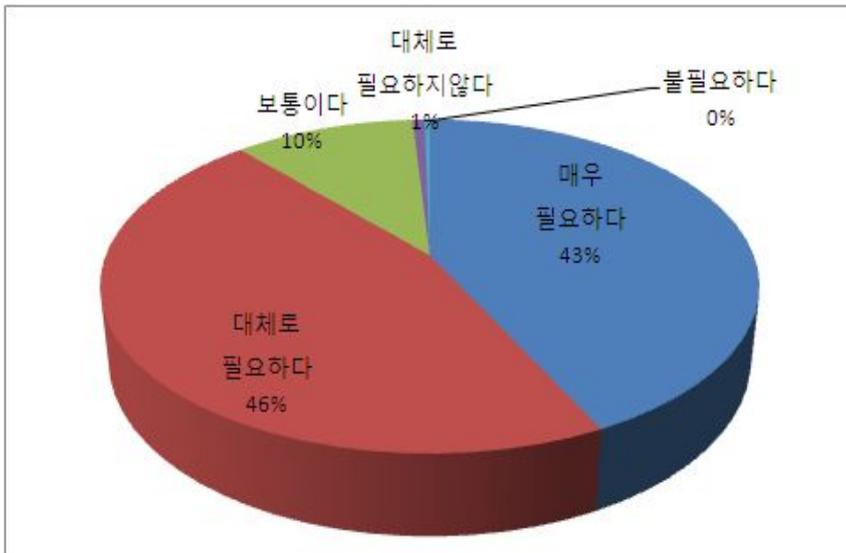
<표 4-3> 충청권경제협의회에 대한 정보수집 매체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무응답	350	46.9
TV	125	16.8
라디오	9	1.2
신문	132	17.7
공문(서)	43	5.8
학회 및 세미나	15	2
자치단체/유관기관홈페이지	47	6.3
구전	25	3.3
전 체	746	100.0

4) 충청권경제협의체에 대한 시민홍보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권경제협의체에 대한 시민홍보가 대체로 필요하다 45.6%, 매우 필요하다 42.7%로 보통이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90%를 상회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가 적극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충청권경제협의체에 대한 시민홍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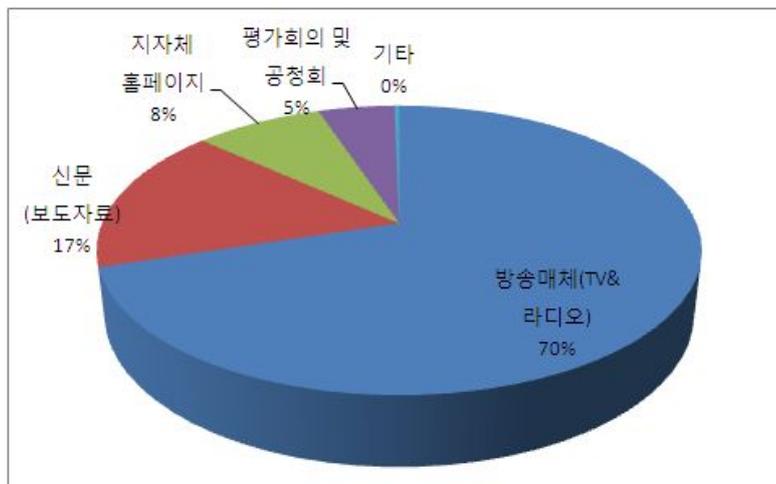
<표 4-4> 충청권경제협의체에 대한 시민홍보의 필요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
매우 필요하다	319	42.7
대체로 필요하다	341	45.6
보통이다	79	10.6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	0.7
불필요하다	2	0.3
전체	746	100.0

5) 충청권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성과의 홍보매체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충청권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성과의 홍보를 위하여 적합한 홍보매체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70.2%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그 이외에 신문(보도자료)이 16.4%, 지자체 홈페이지 8.2%, 평가회의 및 공청회가 4.9%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4-5> 충청권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성과 홍보매체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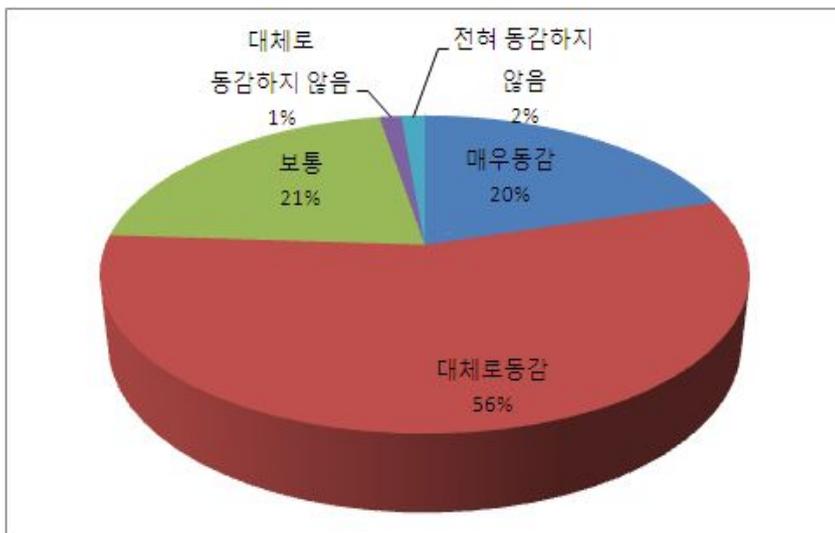
<표 4-5> 충청권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성과 홍보 매체 수단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방송매체(TV&라디오)	524	70.2
신문(보도자료)	122	16.4
지자체 홈페이지	61	8.2
평가회의 및 공청회	37	4.9
기타	2	0.3
전 체	746	100.0

6) 충청권경제협약의 출범 배경 및 당위성에 어느 정도 동감하십니까?

충청권경제협약의 출범 배경 및 당위성과 관련하여 과반수 이상인 55.7%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보통이다(21.3%), 매우 동감한다(20.3%)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아 전반적으로 충청권경제협약의 출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충청권경제협약의 출범 배경 및 당위성에 관한 동감



<표 4-6> 충청권경제협약의 출범 배경 및 당위성에 관한 동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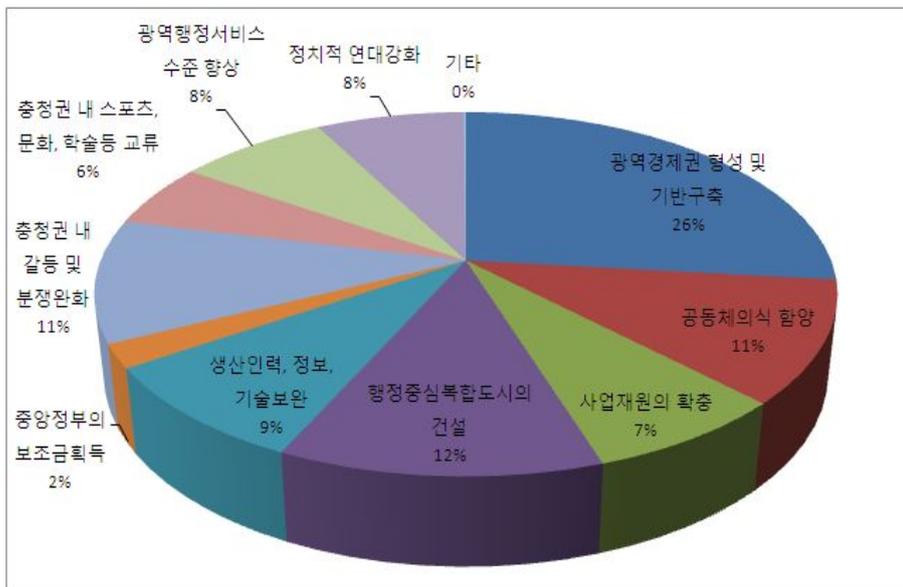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매우 동감한다	151	20.3
대체로 동감한다	416	55.7
보통이다	159	21.3
대체로 동감하지 않는다	10	1.3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10	1.4
전 체	746	100.0

2. 충청권경제협의체의 필요성, 전제조건, 저해요인에 관한 설문

1) 충청권경제협의체 및 충청권 경제협력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충청지역 광역경제권 형성 및 기반구축을 위해 충청권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된 기대이익 실현을 위해(11.9%), 충청권 내 갈등 및 분쟁완화를 위해(10.9%), 충청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충청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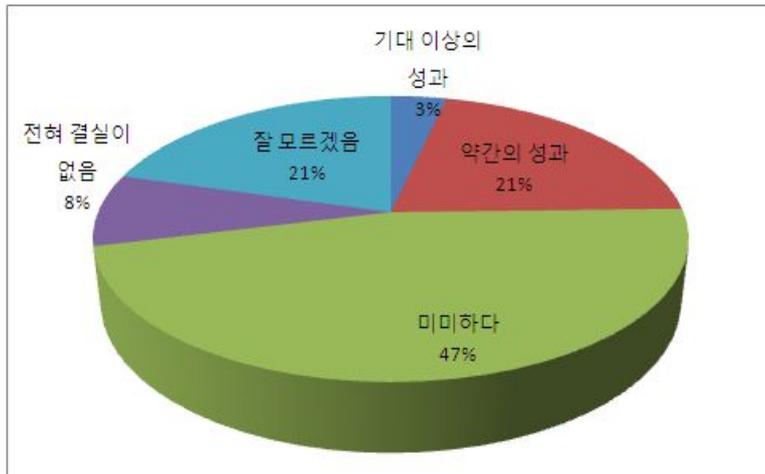
<표 4-7> 충청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충청지역 광역경제권 형성 및 기반구축을 위해	598	26.7
충청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242	10.8
비용분담을 통한 사업재원의 확충	168	7.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된 기대이익 실현위해	266	11.9
부족한 생산인력, 정보, 기술보완을 위해	197	8.8
중앙정부의 보조금획득을 위해	47	2.1
충청권 내 갈등 및 분쟁 완화를 위해	244	10.9
충청권 내 스포츠, 문화, 예술, 학술 등 교류를 위해	128	5.7
광역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174	7.8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연대강화 위해	172	7.7
기타	2	0.1
전 체	2238	100

2) 충청권경제협의체가 발족되기 이전,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3개 지자체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충청권경제협의체가 발족되기 전에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3개 지자체 간의 경제협력 성과에 대하여 미미하다는 46.6%로 가장 응답을 많이 하였다.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21.0%이며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3.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이 20.6%에 달해 충청권의 경제협력 성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며 성과는 대체로 미미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충청권경제협의체 발족되기 전 충청권의 경제협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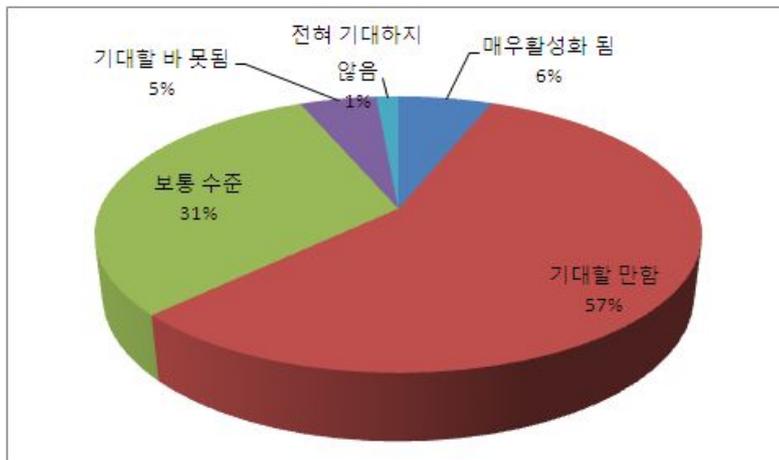
<표 4-8> 충청권경제협의체 발족되기 전 충청권의 경제협력 성과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다	27	3.6
약간의 성과가 있다	157	21
미미하다	347	46.6
전혀 결실이 없다	61	8.2
잘 모르겠다	154	20.6
전 체	746	100

3) 향후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해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3개 지자체간의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향후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해 3개 지자체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기대할 만하다는 답변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이다가 3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향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반면에 기대할 바가 못 된다 4.9%,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1.4%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아마 기존의 경제협의체들의 미미한 성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여 생긴 불신으로 파악된다.

<그림 4-9> 향후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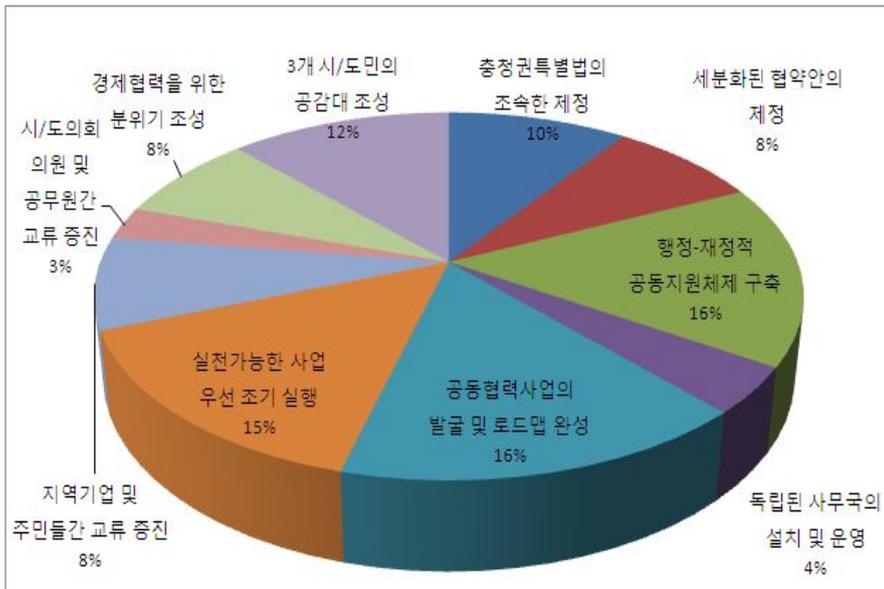
<표 4-9> 향후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전망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
매우 활성화될 것이다	45	6.0
기대할 만하다	423	56.7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이다	231	30.9
기대할 바가 못 된다	37	4.9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10	1.4
전체	746	100.0

4) 충청권경제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복수응답)

충청권경제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행정적-재정적 공동지원체제 구축,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 및 구체적 로드맵 완성이 각각 16.0%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천 가능한 공동협력사업 우선적으로 조기 실행(15.0%), 충청권경제협약에 대한 3개 시/도민의 공감대 조성(12.1%) 순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따라서 충청권경제협약을 이끌어 나갈 확실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림 4-10> 충청권경제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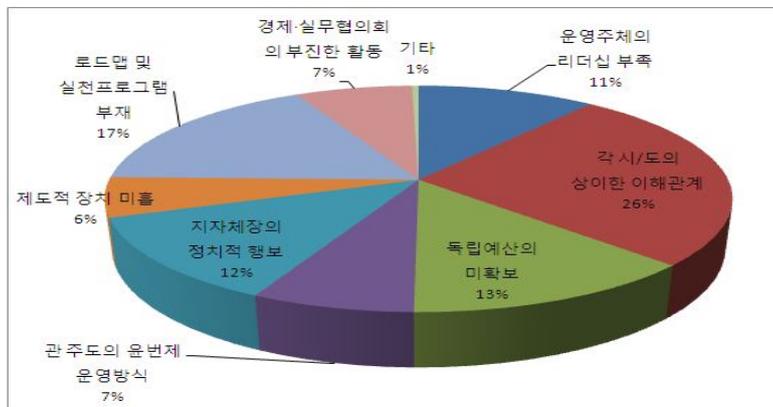
〈표 4-10〉 충청권경제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충청권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219	9.8
세분화된 협약안의 제정 및 적용	184	8.2
행정적-재정적 공동지원체제 구축	358	16.0
독립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92	4.1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 및 구체적 로드맵 완성	357	16.0
실천가능한 공동협력사업 우선적으로 조기 실행	336	15.0
지역기업 및 주민들간의 상호교류협력 증진	181	8.1
시/도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간 교류협력 증진	65	2.9
경제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175	7.8
충청권경제협력에 대한 3개 시/도민의 공감대 조성	271	12.1
전 체	2238	100.0

5) 현시적 관점에서 충청권 경제 협의체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현시적 관점에서 충청권 경제협의체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각 시/도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26.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 경제협력사업 로드맵 및 실천 프로그램 부재(17.1%), 독립예산의 미확보(13.1%) 순으로 저해요인을 꼽았다. 충청권 경제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 충북, 대전광역시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요구되고 있다.

<그림 4-11> 현 시점의 충청권 경제협의체 활성화 저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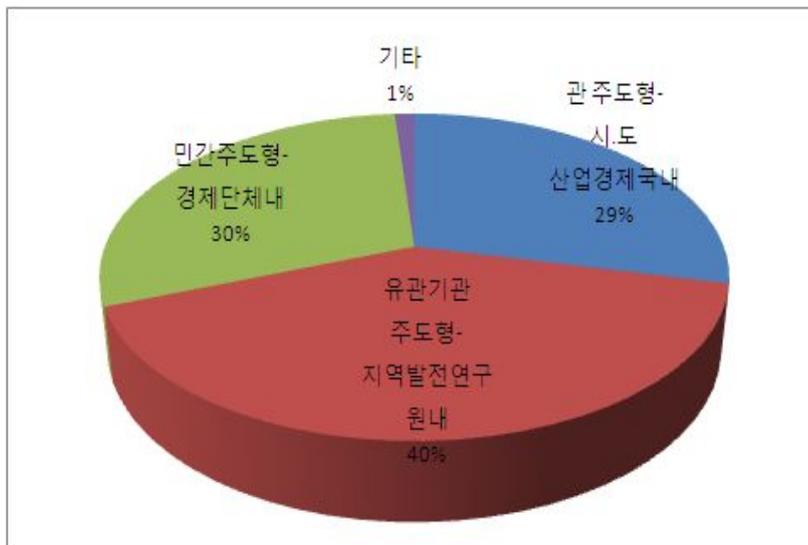
<표 4-11> 현 시점의 충청권 경제협의체 활성화 저해요인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운영주체의 리더십 부족	242	10.8
각 시/도의 상이한 이해관계	588	26.3
독립예산의 미확보	293	13.1
관 주도의 운번제 운영방식	161	7.2
지자체장의 정치적 행보	275	12.3
사무국 등 제도적 장치 미흡	128	5.7
경제협력사업 로드맵 및 실천프로그램 부재	383	17.1
경제·실무협의회의 부진한 활동	159	7.1
기 타	9	0.4
전 체	2238	100.0

6) 충청권경제협의체를 이끌어갈 사무국의 설치형태 및 장소로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충청권경제협의체의 사무국의 설치형태에 관해서는 유관기관 주도형-지역발전연구원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40.6%)고 답변하였으며 민간주도형-경제단체내에는 29.6%, 관 주도형-시.도 산업경제국내 28.6% 순으로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4-12> 충청권경제협의체 사무국의 적합한 설치형태 및 장소



<표 4-12> 충청권경제협의체 사무국의 적합한 설치형태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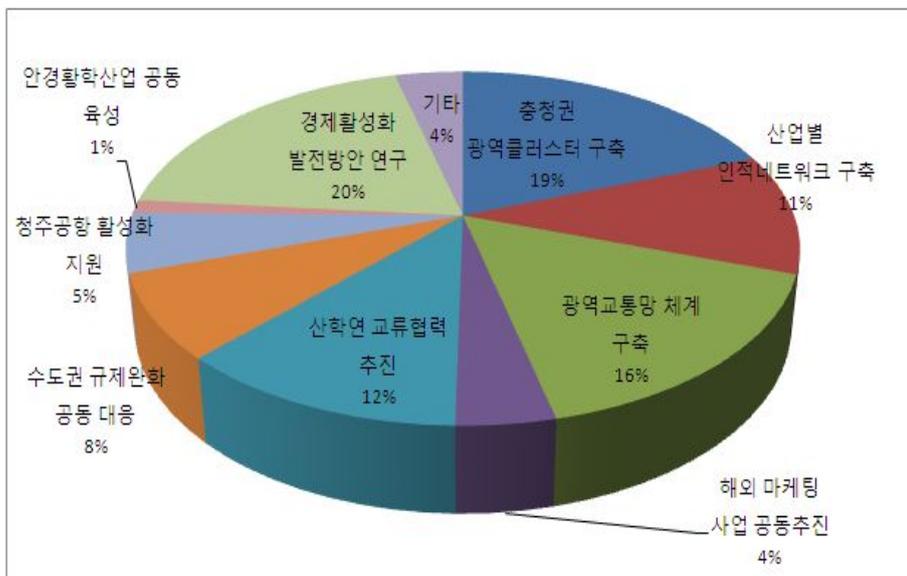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관 주도형-시.도 산업경제국내	213	28.6
유관기관 주도형-지역발전연구원내	303	40.6
민간주도형-경제단체내	221	29.6
기타	9	1.2
전 체	746	100.0

3. 충청권 경제협력방안 관련 설문

1)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족 시 합의된 추진과제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분야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족 시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로는 충청권 경제활성화 공동발전방안 연구(19.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충청권 광역클러스터 구축(19.2%), 행정 중심복합도시 연계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16.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기업 경쟁력을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추진, 산업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등이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족 시 우선되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4-13> 충청권경제협의회 발족 시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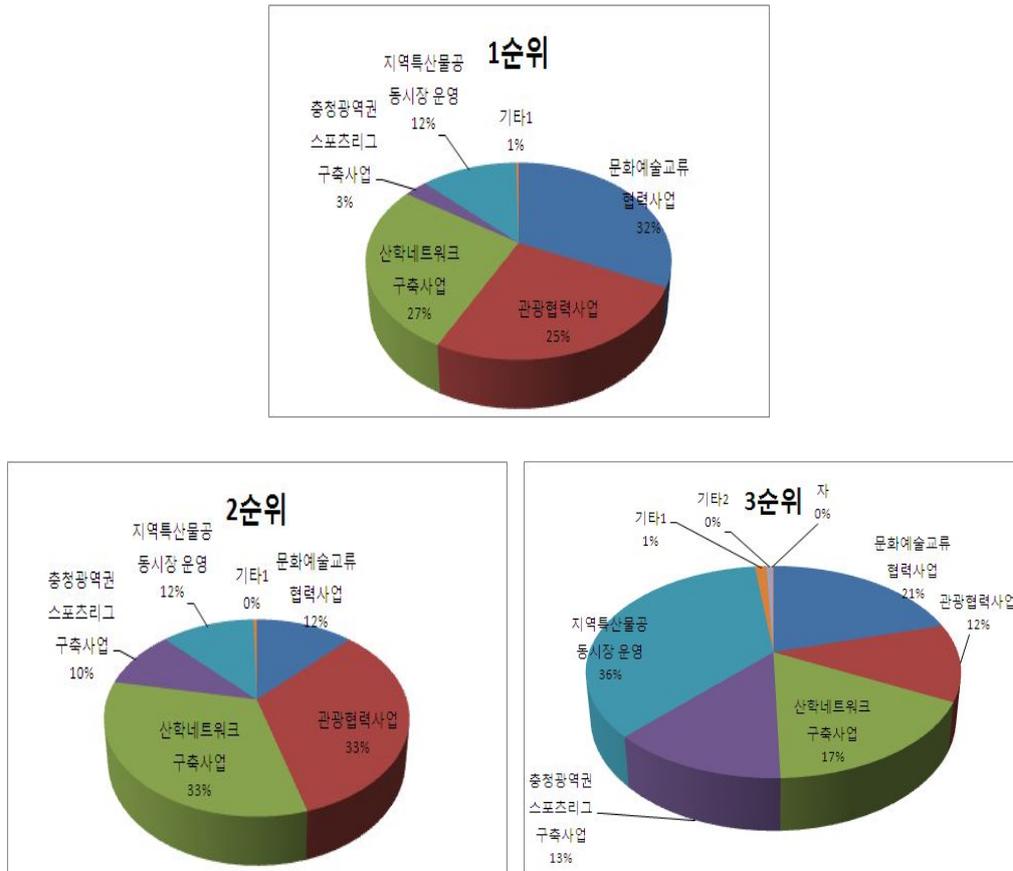
〈표 4-13〉 충청권경제협의체 발족 시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충청권 광역클러스터 구축	430	19.2
산업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246	11.0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358	16.0
해외 사무소 및 해외 수출 마케팅 사업 공동추진	90	4.0
기업 경쟁력을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추진	264	11.8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172	7.7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및 공동 대응	121	5.4
충청권 안경황학산업 공동 육성	27	1.2
충청권 경제활성화 발전방안 연구	438	19.6
기타	87	3.9
전 체	2238	100.0

2) 위의 1)문항에서 언급된 것 외에 타당성을 지니는 지역 협력 사업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1) 문항 외에 중요한 지역 협력 사업으로 응답한 1순위 사업은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32.1%)이 꼽혔다. 2순위로는 관광협력사업(33.4%), 3순위로는 지역특산물 공동시장운영(35.8%)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4-14> 1) 문항 외의 중요한 지역협력 사업



〈표 4-14〉 1) 문항 외의 중요한 지역협력 사업

구 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	35.4	32.1	12.4	20.6
관광협력사업	38.6	25.3	33.4	11.8
산학네트워크 구축사업	41.0	27.2	32.7	17.1
충청광역권 스포츠 리그 구축사업	10.0	2.9	9.2	12.8
지역특산물 공동시장 운영	24.1	12.2	11.9	35.8
기타 1	0.7	0.3	0.4	1.2
기타 2	0.1	0.0	0.0	0.4
자	0.1	0.0	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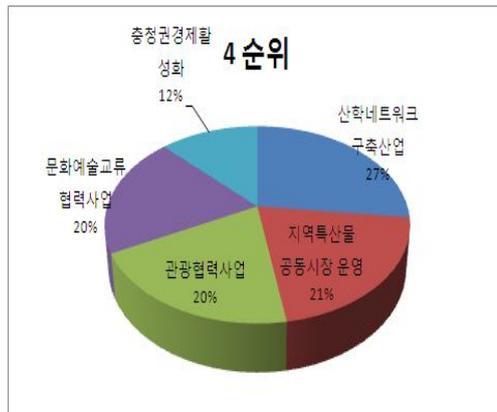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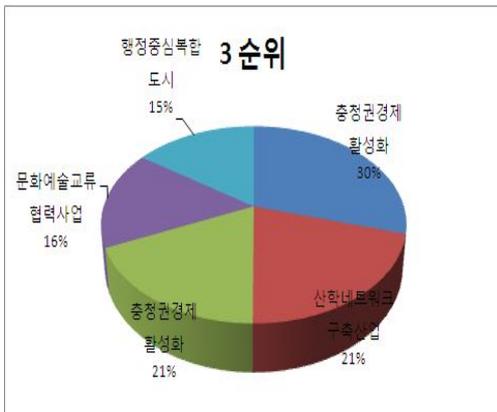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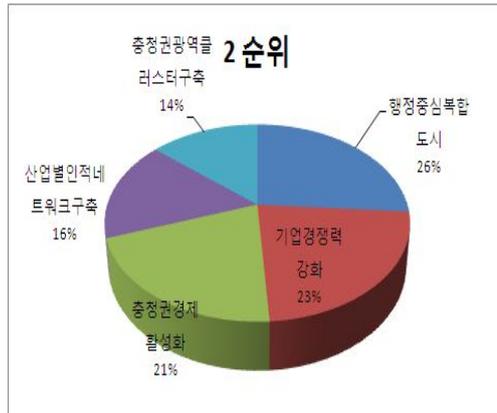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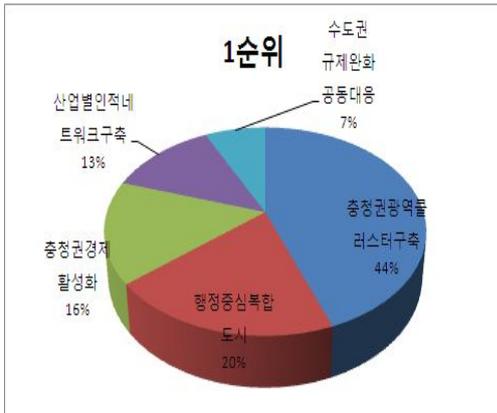
3) 위의 1) 문항 사업과 2) 문항 사업을 총망라하여 순위를 다시 조정 한 후, 중요한 순서대로 4가지만을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 그림은 1), 2) 문항의 사업을 총망라하여 4순위까지 매겨 각 순위별 비중이 높은 5개 사업을 나타낸 것이다. 1순위로 꼽은 사업 중 충청권광역클러스터구축의 비중이 제일 컸으며 그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 경제 활성화, 산업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경쟁력 강화, 충청권 경제활성화, 산업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3순위로는 충청권 경제활성화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산학네트워크 구축산업, 관광협력산업 등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마지막 4순위로는 산학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비중이 컸으며 그 외에 지역특산물 공동시장 운영,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 관광협력사업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각 순위별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정리해보자면 1순위 충청권광역클러스터구축사업, 2순위 행정중심복합도시, 3순위 충청권 경제활성화, 4순위 산학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표 4-15> 지역협력 사업 중요도

구 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충청권 광역클러스터구축	45.4	36.0	7.8	5.5	3.2
행정중심복합도시	32.5	16.1	14.8	9.1	2.9
충청권 경제 활성화	32.5	12.9	11.7	17.4	8.5
산업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21.6	10.4	9.4	6.6	3.2
기업경쟁력 강화	19.4	5.0	12.9	7.9	3.2
산학네트워크 구축산업	18.5	2.2	7.5	12.2	18.3
관광협력사업	14.6	1.6	5.5	10.8	13.7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13.8	5.9	6.8	4.3	2.6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	13.6	1.4	5.3	9.6	13.7
지역특산물 공동시장 운영	10.5	1.0	4.9	4.5	14.1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8.9	2.4	4.7	4.0	3.7
해외 사무소 및 해외 수출	7.5	3.0	4.3	1.9	1.4
기타 공동추진	4.7	0.7	2.0	3.6	2.6
충청광역권 스포츠 리그 구축사업	4.4	0.6	1.3	2.2	6.9
충청권 안경광학산업	1.3	0.4	0.6	0.4	0.9
기타1	0.9	0.1	0.6	0.0	1.2
기타2	0.1	0.1	0.0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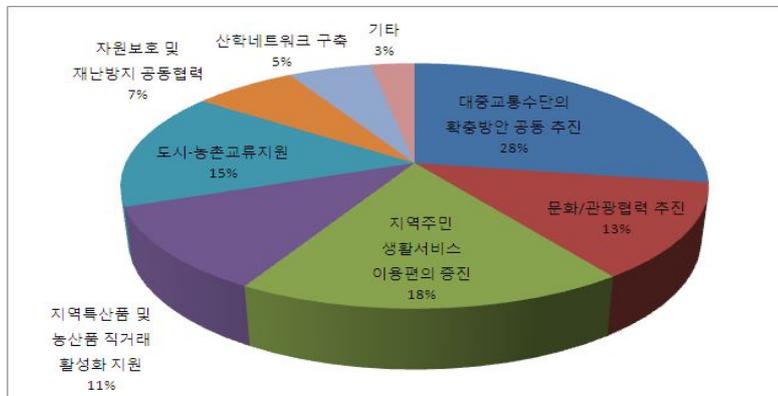
<그림 4-15> 지역협력 사업 중요도



4) 다음 중에서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현 시점에서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는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방안 공동추진(27.6%) 이었으며 그 외에 충청광역권 내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증진(18.1%),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도시-농촌교류지원(15.5%)순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가 조사되었다.

<그림 4-16>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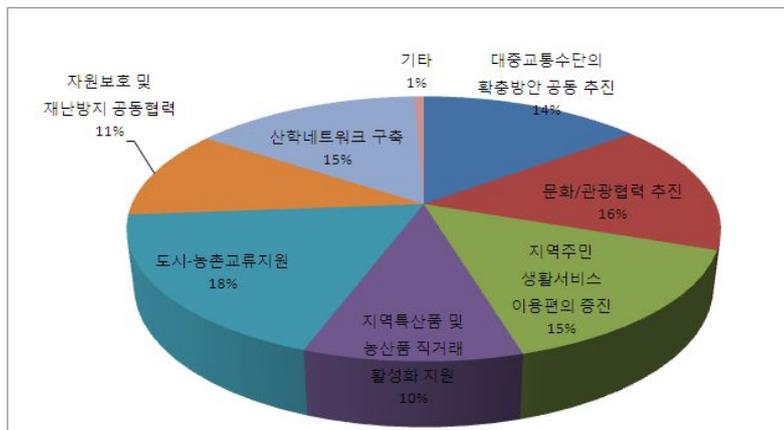
<표 4-16>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방안 공동 추진	411	27.6
문화/관광협력 추진	188	12.6
충청권 내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269	18.1
지역특산품 및 농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	167	11.2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도시-농촌교류지원	231	15.5
자원보호 및 재난방지 공동협력	101	6.8
충청권 내 산학네트워크 구축	82	5.5
기타	43	2.9
전 체	1492	100.0

5) 다음 중에서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부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반면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부진한 분야로는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도시-농촌교류지원(18.2%)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협력 추진(16.0%), 충청권 내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증진(15.0%)이 부진한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충청권경제협의체는 이와 같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진한 분야에 활성화를 불어넣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림 4-17>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부진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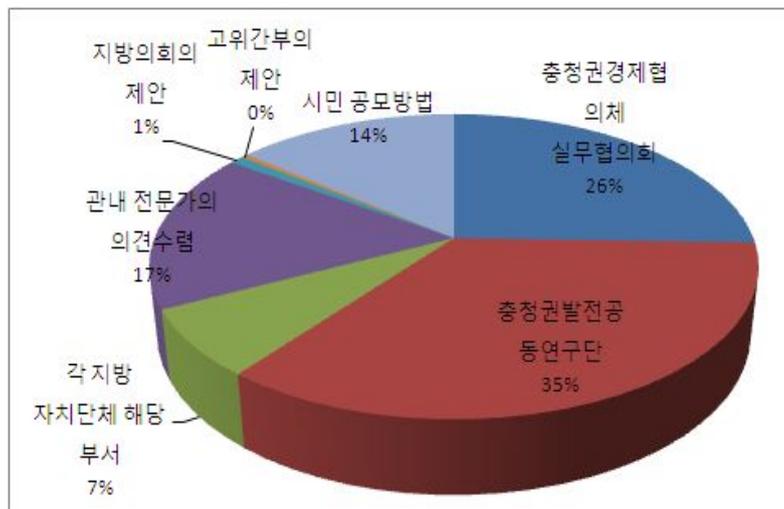
<표 4-17>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가장 부진한 분야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방안 공동 추진	216	14.5
문화/관광협력 추진	239	16.0
충청권 내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224	15.0
지역특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49	10.0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도시-농촌교류지원	271	18.2
자원보호 및 재난방지 공동협력	163	10.9
충청권 내 산학네트워크 구축	221	14.8
기타	9	0.6
전 체	1492	100.0

6) 다음 중에서 충청권 지역경제협력사업(과제) 발굴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충청권 지역경제사업(과제) 발굴 방법으로는 충청권발전공동연구단(3개 시/도 발전연구원)을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35.1%)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청권경제협의체 실무협의체(25.5%), 세미나 등을 통한 관내 전문가의 의견수렴(17.0%)을 통해 지역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 등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18> 충청권지역 경제협력사업(과제) 발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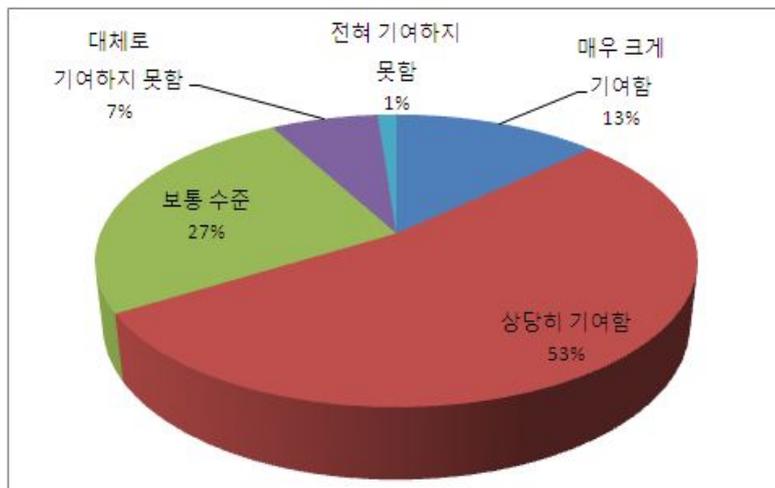
<표 4-18> 충청권지역 경제협력사업(과제) 발굴 방법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충청권경제협의체 실무협의체	190	25.5
충청권발전공동연구단(3개 시/도 발전연구원)	261	35.1
각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의 제안	53	7.1
세미나를 통한 관내 전문가의 의견수렴	127	17.0
지방의회의 제안	7	0.9
단체장 등 고위간부의 제안	3	0.4
시민 공모방법	105	14.1
전 체	746	100.0

7)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은 대전/충청권 지역경제협력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대전/충청권 지역경제협력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여타의 협력사업의 수준일 것이다 25.5%,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3.2%로 보통 이상을 응답한 비중이 90%를 넘어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9>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협력 발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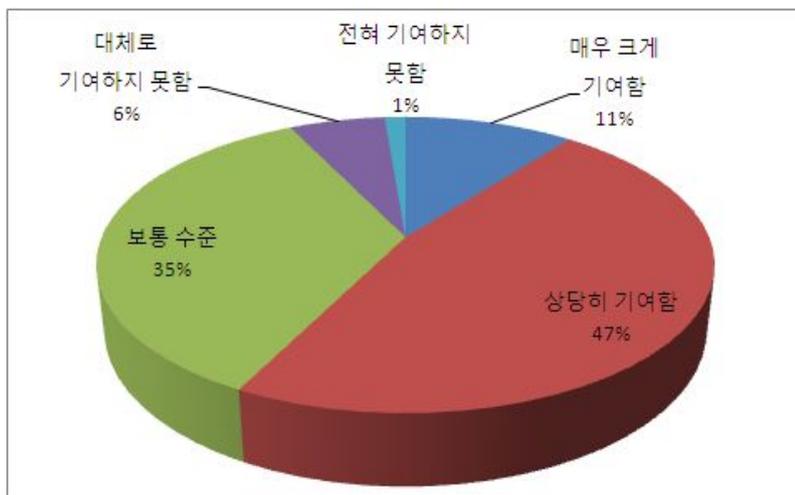
<표 4-19>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협력 발전 기여도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98	13.2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397	53.2
보통 수준일 것이다	190	25.5
대체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52	6.9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9	1.2
전체	746	100

8)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대전/충청권의 지역경제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지역경제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46.9%, 보통의 여타 협력사업의 수준일 것이다 35.1%,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0.6%로 보통이상의 응답의 비중이 90%를 넘어 지역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기여도에 긍정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4-20>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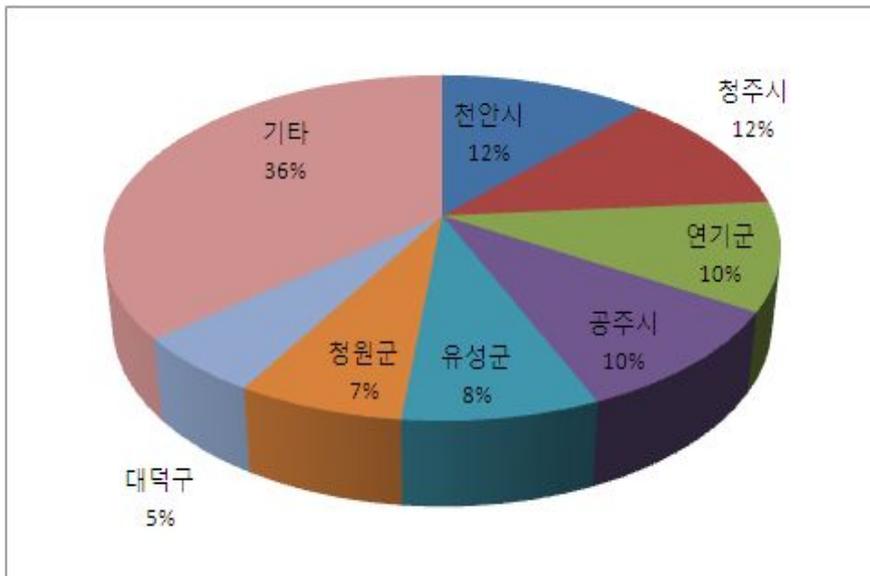
<표 4-20>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도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79	10.6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350	46.9
보통 수준일 것이다	262	35.1
대체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45	6.0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10	1.3
전 체	746	100.0

9) 충청권경제협의회를 통한 지역경제협력사업의 최고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아래의 <표1>에서 지역구분 없이 5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그림은 충청권경제협의회를 통해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의 지역 중 최고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최상위 7개 시/도의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며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결과로서 천안시(11.9%)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청주시(11.7%), 연기군(10.1%), 공주시(9.9%), 유성구(7.9%) 순으로 지역경제협력 사업 예상 수혜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4-21>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수혜지역



<표 4-21>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수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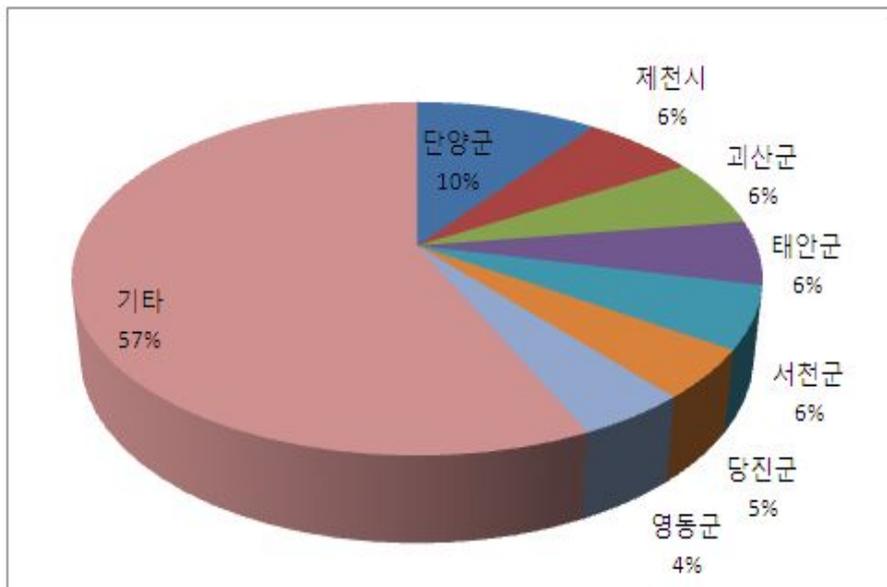
(단위 : %)

항목	평균	총계	C9-1	C9-2	C9-3	C9-4	C9-5
천안시	11.9	59.7	32.4	9.5	7.1	6.0	4.7
청주시	11.7	58.3	6.2	14.5	17.0	13.8	6.8
연기군	10.1	50.6	15.4	14.2	9.6	6.9	4.5
공주시	9.9	49.3	11.8	17.7	8.2	5.8	5.8
유성군	7.9	39.5	4.5	4.3	4.0	9.4	17.3
청원군	6.7	33.6	1.2	4.9	9.2	10.8	7.5
대덕구	5.4	26.9	5.3	2.9	3.3	6.8	8.6
계룡시	3.5	17.4	2.4	4.0	4.0	2.7	4.3
아산시	3.1	15.6	1.0	4.6	4.3	3.7	2.0
서구	2.7	13.4	2.3	0.9	2.7	3.2	4.3
동구	2.3	11.6	3.7	0.6	1.9	2.2	3.2
논산시	2.2	11.1	1.6	1.9	2.0	2.6	3.0
당진군	2.0	10.2	1.3	2.0	1.2	1.4	4.3
홍성군	1.9	9.7	1.3	2.2	3.3	1.9	1.0
옥천군	1.8	8.8	0.7	1.3	1.9	2.9	2.0
중구	1.7	8.6	1.0	2.3	1.6	1.7	2.0
충주시	1.7	8.5	0.1	0.7	2.7	2.7	2.3
부여군	1.5	7.6	1.3	2.0	1.7	1.0	1.6
금산군	1.4	7.2	1.6	1.4	1.0	1.3	1.9
예산군	1.4	7.0	0.3	1.6	1.4	1.7	2.0
보령시	1.2	6.0	0.7	1.2	2.9	0.6	0.6
태안군	1.2	5.9	1.0	1.0	1.3	1.7	0.9
서산시	1.1	5.7	0.7	0.9	1.7	1.2	1.2
증평군	0.8	4.0	0.0	0.7	0.6	1.4	1.3
서천군	0.7	3.6	0.9	0.4	0.4	1.0	0.9
청양군	0.7	3.5	0.3	0.6	1.2	1.0	0.4
영동군	0.6	3.2	0.3	0.3	0.7	0.9	1.0
보은군	0.6	3.0	0.4	0.1	1.0	0.6	0.9
제천시	0.6	2.8	0.0	0.3	0.9	1.2	0.4
진천군	0.5	2.7	0.3	0.3	0.3	0.6	1.2
음성군	0.5	2.6	0.0	0.1	0.7	0.4	1.4
괴산군	0.3	1.5	0.0	0.6	0.0	0.6	0.3
단양군	0.2	1.1	0.0	0.0	0.1	0.4	0.6

10)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한 지역경제협력사업의 혜택으로부터 거리가 먼 예상되는 지역을 아래의 <표1>에서 지역구분 없이 5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반면에 다음은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해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의 지역 중 최고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최상위 7개 시/도의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며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은 단양군(10.2%)을 중심으로 제천시(6.3%), 괴산군(6.2%), 태안군(5.9%), 서천군(5.7%)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4-22>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비수혜 지역



<표 4-22> 지역경제협력사업 예상 비수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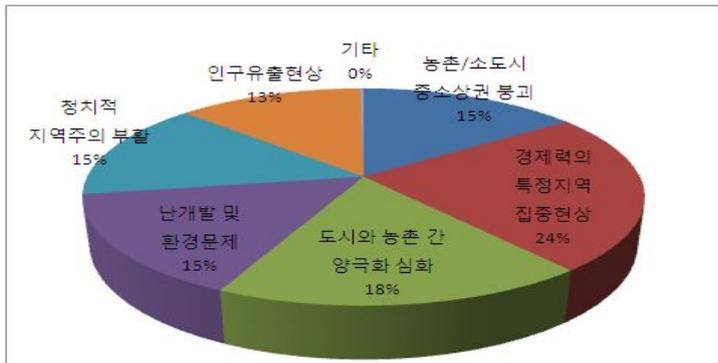
(단위 : %)

항목	평균	합계	C10-1	C10-2	C10-3	C10-4	C10-5
단양군	10.2	51.2	10.9	10.4	7.1	10.1	12.7
제천시	6.3	31.6	5.3	10.5	5.6	5.3	4.9
괴산군	6.2	31.0	3.7	5.3	8.9	7.9	5.2
태안군	5.9	29.6	6.8	6.8	5.3	6.5	4.2
서천군	5.7	28.7	11.5	5.8	5.2	3.6	2.6
당진군	4.5	22.3	3.6	4.9	4.9	2.9	6.0
영동군	4.4	22.2	3.6	4.0	4.5	7.1	3.0
음성군	4.4	21.9	1.3	2.4	4.5	6.9	6.8
동구	3.9	19.4	4.3	0.9	2.6	3.5	8.1
증평군	3.6	18.1	1.7	3.3	4.5	4.9	3.7
진천군	3.3	16.5	1.4	2.2	3.5	4.7	4.7
청양군	3.1	15.4	4.5	5.2	1.4	1.6	2.7
충주시	2.9	14.5	3.0	2.4	3.9	2.0	3.2
홍성군	2.9	14.4	1.6	5.8	1.9	2.9	2.2
보은군	2.9	14.3	2.7	1.9	5.3	2.4	2.0
옥천군	2.8	14.0	1.3	2.3	4.2	3.6	2.6
청주시	2.7	13.5	4.2	3.7	2.6	1.7	1.3
서산시	2.7	13.5	3.5	2.4	2.6	2.4	2.6
금산군	2.4	11.8	4.3	1.9	2.6	1.4	1.6
예산군	2.3	11.6	1.3	2.0	3.7	2.2	2.4
보령시	2.0	9.8	3.3	1.3	1.6	1.9	1.7
증구	1.9	9.8	0.7	2.6	0.6	2.3	3.3
부여군	1.7	8.6	3.3	2.4	1.3	1.3	0.3
연기군	1.5	7.6	1.4	2.9	1.6	1.3	0.4
서구	1.5	7.5	1.2	0.6	2.7	0.6	2.4
계룡시	1.4	6.9	1.9	1.4	1.7	0.9	1.0
논산시	1.2	6.1	1.9	1.3	1.2	1.3	0.4
유성구	1.2	5.9	1.0	0.9	0.3	0.7	3.0
대덕구	1.1	5.5	0.3	0.1	0.9	2.2	2.0
천안시	1.1	5.4	2.7	0.3	0.9	1.2	0.3
청원군	1.1	5.3	0.4	0.4	1.9	1.6	1.0
공주시	0.8	4.2	0.7	1.0	0.7	0.6	1.2
아산시	0.5	2.5	0.6	0.7	0.1	0.7	0.4

11) 충청권경제협의회를 통한 3개 시/도간 경제협력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을 중요한 순으로 3개만 선택하여주십시오.(복수응답)

충청권경제협의회를 통해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의 경제협력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경제력의 특정지역 집중현상(23.8%)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역내 도시와 농촌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18.2%), 난개발 및 환경문제의 대두(15.3%) 순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응답하였다. 충청권경제협의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촌/소도시 지역 중소기업의 붕괴, 정치적 지역주의의 부활, 농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유출현상의 발생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경제협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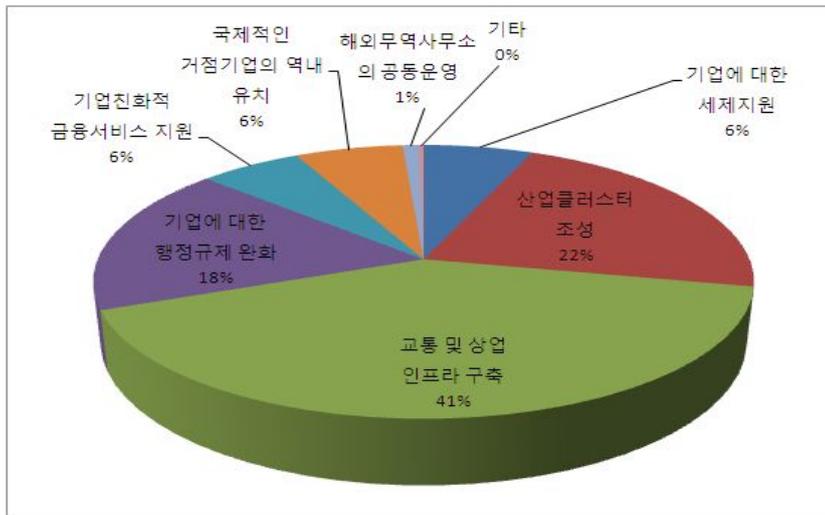
<표 4-23> 경제협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농촌/소도시 중소기업 붕괴	338	15.1
경제력의 특정지역 집중현상	534	23.8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심화	407	18.2
난개발 및 환경문제	342	15.3
정치적 지역주의 부활	327	14.6
농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유출현상	286	12.8
기타	4	0.2
전 체	2238	100.0

12) 충청권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충청권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교통 및 상업 인프라의 구축이 41.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산업클러스터의 조성(21.9%),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17.6%) 순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4> 충청권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표 4-24> 충청권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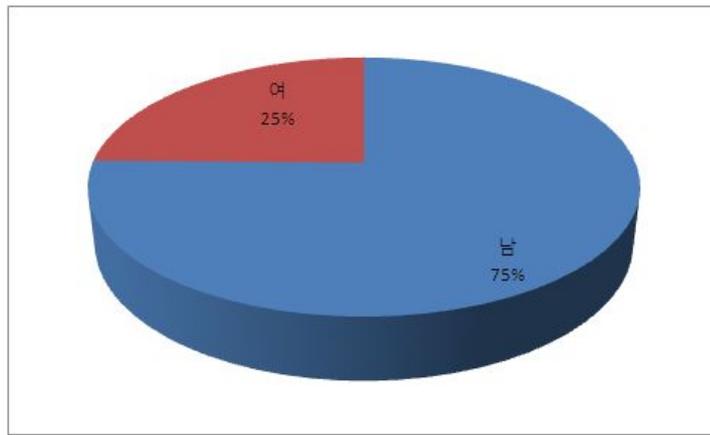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47	6.3
산업클러스터 조성	163	21.9
교통 및 상업 인프라 구축	306	41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131	17.6
기업친화적 금융서비스 지원	44	5.9
국제적인 거점기업의 역내 유치	46	6.2
해외무역사무소의 공동운영	7	0.9
기타	2	0.3
전체	746	100.0

4. 응답자 개인적 사항에 관한 설문

1) 선생님의 해당되는 성별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전체 695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자가 523명(75.3%), 여자가 172명(24.7%)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그림 4-25>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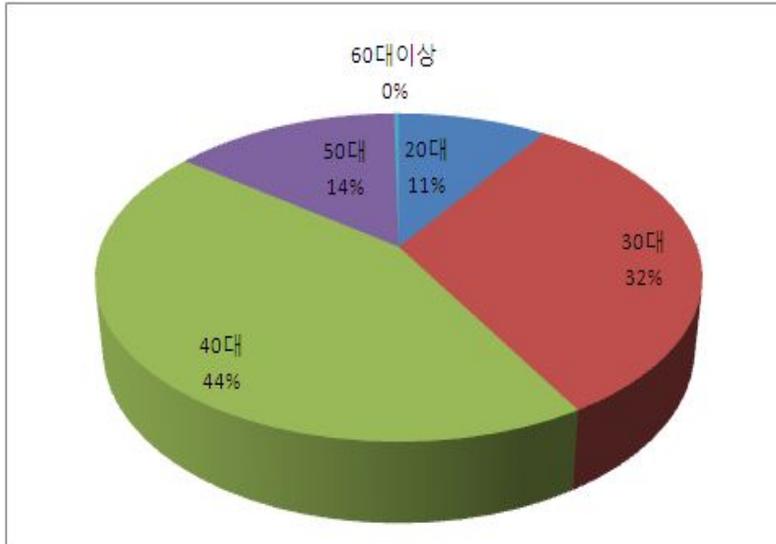
<표 4-25> 응답자의 성별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남 자	562	75.3
여 자	184	24.7
전 체	746	100

2) 선생님의 해당되는 연세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응답자의 연령에 대하여 40대가 304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23명 (32.1%), 50대 100명(14.4%), 20대가 66명(9.5%)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6> 응답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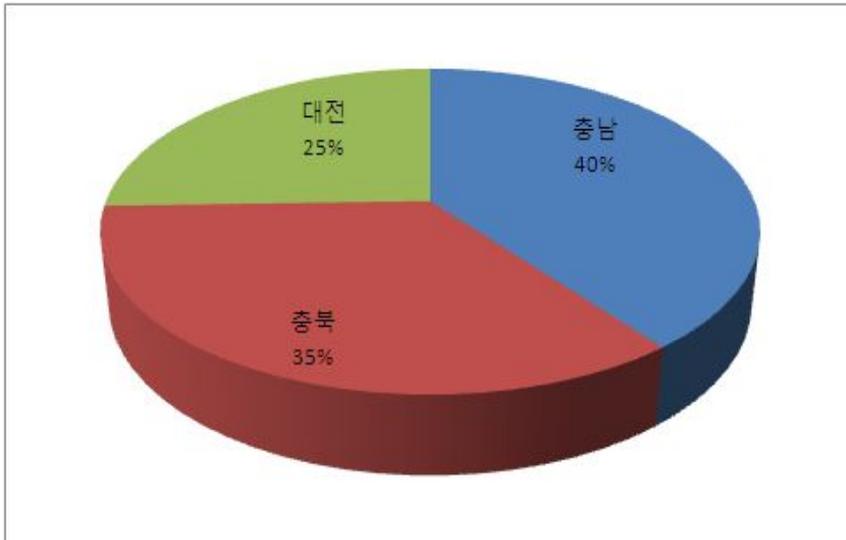
<표 4-26> 응답자의 연령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20대	71	9.5
30대	240	32.1
40대	326	43.7
50대	107	14.4
60대이상	2	0.3
전 체	746	100.0

3)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소속단체의 해당 지역은 어디입니까?

응답자의 소속단체의 지역으로 충남이 275명(39.6%), 충북 243명(35.0%), 대전광역시 177명(25.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7>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소속단체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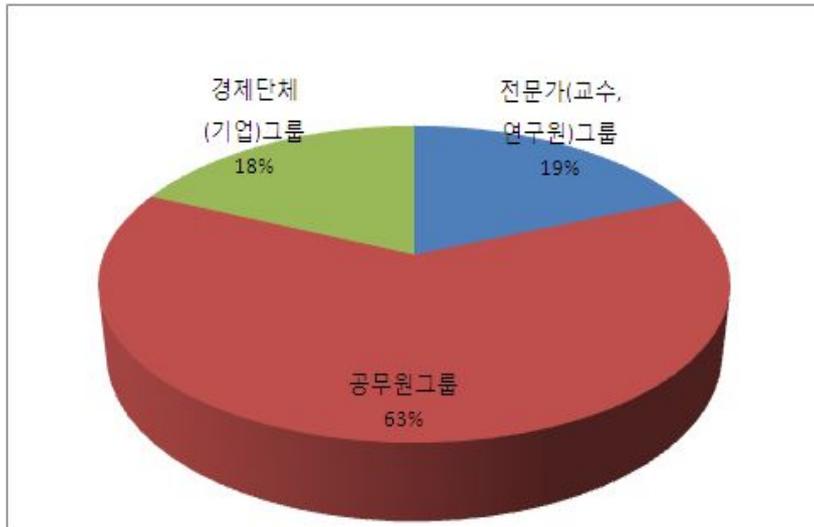
<표 4-27>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소속단체의 지역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충 남	295	39.6
충 북	261	35.0
대 전	190	25.5
전 체	746	100.0

4) 선생님의 직업 또는 소속단체의 성격상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응답자의 직업 또는 소속단체로는 공무원 그룹이 437명(62.9%)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단체(기업)그룹 127명(18.3%), 전문가 그룹(교수, 연구원)이 131명(18.8%)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28> 응답자의 직업 또는 소속 단체



<표 4-28> 응답자의 직업 또는 소속 단체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
전문가(교수, 연구원)그룹	140	18.8
공무원그룹	469	62.9
경제단체(기업)그룹	137	18.3
전체	746	100.0

5) 선생님께서는 현 직장(단체, 조직)에서 몇 년간 종사하고 계십니까?

응답자의 현 직장의 종사기간은 1년에서 5년 미만이 237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이상 종사자도 206명(29.6%)으로 상당히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그림 4-29> 응답자의 현 직장 종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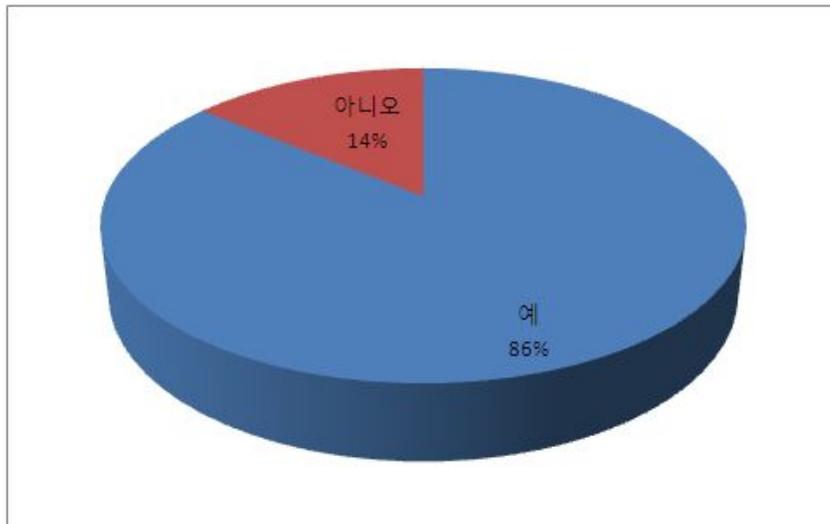
<표 4-29> 응답자의 현 직장 종사 기간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
1년~5년 미만	237	34.1
5년~10년 미만	120	16.1
10년~15년 미만	150	20.1
15년 이상	206	29.6
전체	746	100.0

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직장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 하십니까?

응답자의 근무하는 직장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치하는 응답자는 596명(85.8%) 이었으며 일치하지 않은 응답자는 99명(14.2%)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0> 응답자 직장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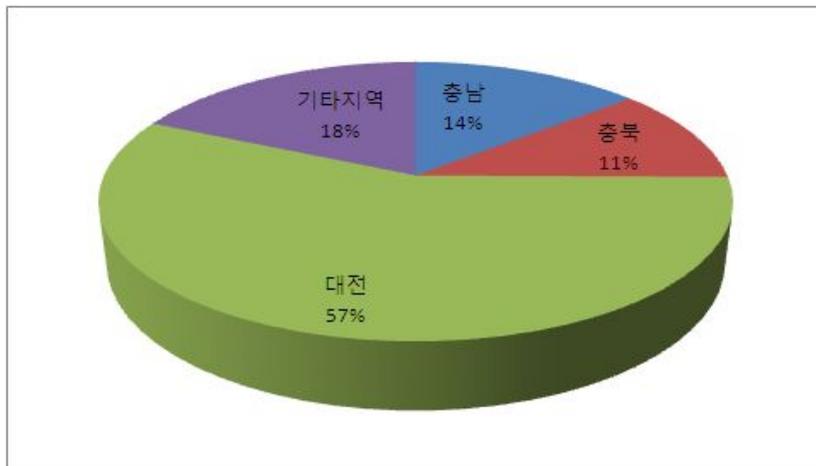
<표 4-30> 응답자 직장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
예	640	85.8
아니오	106	14.2
전체	746	100.0

7) 선생님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D6의 질문에서 응답자의 직장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99명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지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충남 14명, 충북 11명, 대전 56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1〉 응답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표 4-31〉 응답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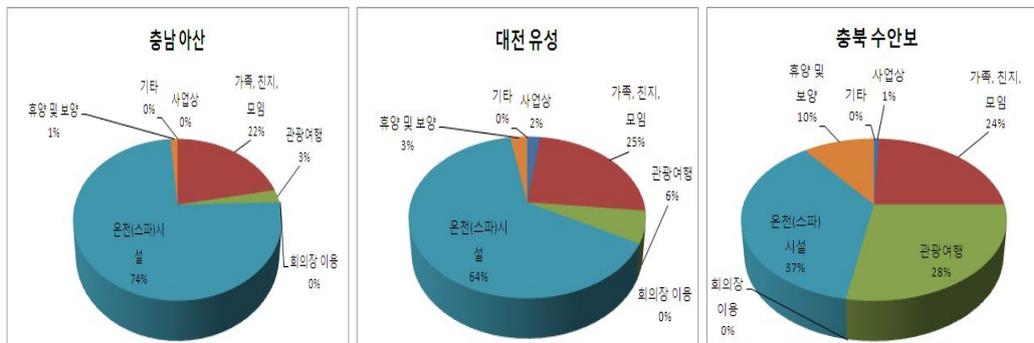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무응답(직장과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640	85.8
충남도민이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13	2.0
충북도민이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12	1.6
대전시민이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61	8.1
타지역의 주민이 충청권에서 근무하는 경우	20	2.6
전 체	746	100.0

제2절 온천관광협력 설문분석

1) 귀하가 이 온천을 이용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충청권 온천을 이용하는 목적에 관한 질문의 답변은 아산과 유성은 온천(스파)시설 이용이 각각 74.2%와 64.8%로 과반수가 넘었지만, 수안보의 경우 온천시설이용은 36.8%이고, 관광여행의 목적이 타 온천에 비해 높게 나왔다. 온천시설 이용 이외에 가족, 친지, 모임을 위한 이용목적이 큰 반면에 회의장 이용, 사업상 이용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2> 온천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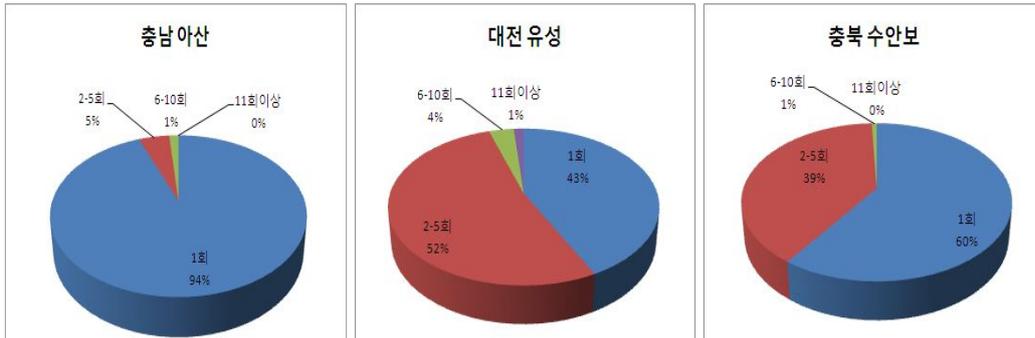
<표 4-32> 온천 이용 목적

구분	충남 아산		대전 유성		충북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사업상	0	0	3	2.1	1	0.7
가족, 친지, 모임	33	21.9	35	24.8	35	24.3
관광여행	4	2.6	9	6.4	40	27.8
회의장 이용	0	0	0	0	0	0
온천(스파)시설	112	74.2	90	64.8	53	36.8
휴양 및 보양	2	1.3	4	2.8	15	10.4
기타	0	0	0	0	0	0
전체	151	100	141	100	144	100

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온천관광지를 몇 회 이용하셨습니다?

최근1년간 온천 이용횟수는 아산과 수안보의 방문객의 경우 1회가 각각 94.0%와 59.7%이며, 유성온천의 방문객은 2-5회가 52.5%로 가장 높았다. 유성의 경우 아산과 수안보에 비해 11회 이상 방문객도 1.4%에 달해 타 지역에 비해 온천 방문객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4-33> 온천 관광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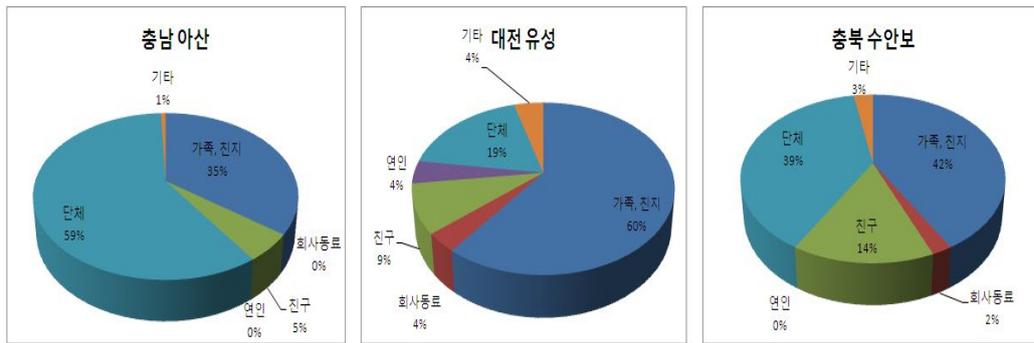
<표 4-33> 온천 관광 횟수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1회	142	94.0	60	42.6	86	59.7
2-5회	7	4.6	74	52.5	57	39.6
6-10회	2	1.4	5	3.5	1	0.7
11회이상	0	0	2	1.4	0	0
전체	151	100	141	100	144	100

3) 귀하는 이 온천관광지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방문형태는 아산온천의 경우 단체 관광객이 58.9%로 많았으며, 유성과 수안보는 가족, 친지와 함께 온 관광객이 60.3%와 41.7%로 가장 높았다. 아산은 단체 관광객 다음으로 가족, 친지방문이 35.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성의 경우 가족, 친지방문 외에 단체(18.4%), 친구(9.2%), 회사동료(3.5%), 연인 및 기타(4.3%)로 타 지역보다 다양한 형태의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4> 온천 관광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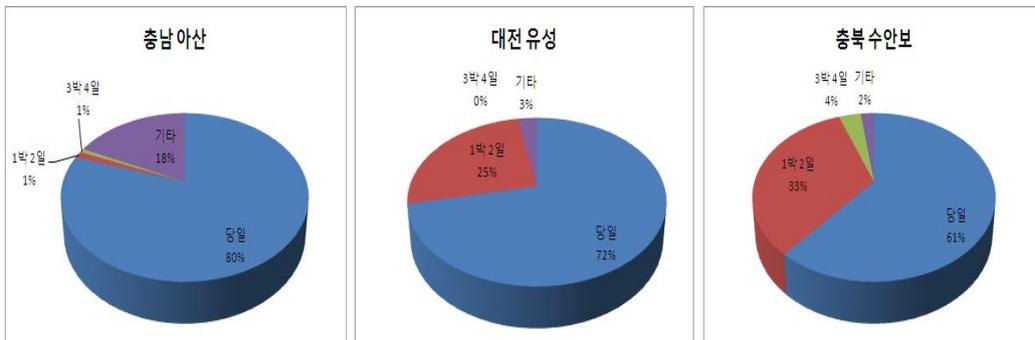
<표 4-34> 온천 관광 형태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가족, 친지	53	35.1	85	60.3	60	41.7
회사동료	0	0	5	3.5	3	2.1
친구	8	5.3	13	9.2	21	14.6
연인	0	0	6	4.3	0	0
단체	89	58.9	26	18.4	56	38.9
기타	1	0.7	6	4.3	4	2.8
전체	151	100	141	100	144	100

4) 이곳에 머무신 기간은 몇 일입니까?

방문기간은 아산온천, 유성온천, 수안보온천 모두 당일 관광객이 각각 80.1%, 71.6%, 61.1%로 가장 높았다. 그 중 아산온천 지역이 당일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방문기간이 길지 않았다. 반면에 유성은 1박 2일 관광객이 25.5%로 당일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수안보온천은 1박 2일이 33.3%, 3박 4일이 3.5%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세 지역 가운데 수안보온천지역에서 더 오랜 기간동안 방문함이 조사되었다.

<그림 4-35> 온천 관광 시 방문기간



<표 4-35> 온천 관광 시 방문기간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당일	121	80.1	101	71.6	88	61.1
1박 2일	2	1.3	36	25.5	48	33.3
3박 4일	1	0.7	0	0	5	3.5
기타	27	17.9	4	2.8	3	2.1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5) 숙박시설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셨습니다?

이용한 숙박시설은 수안보는 타 온천에 비해 여관과 호텔이 39.6%와 22.2%로 높았으며, 아산과 유성은 기타 관광객이 74.2%와 61.7%로 높았다. 아산의 경우 기타다음으로 콘도미니엄(17.2%), 호텔(6.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성의 경우 기타다음으로 여관(22.0%), 호텔(14.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6> 온천 관광 시 숙박시설 이용형태



<표 4-36> 온천 관광 시 숙박시설 이용형태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호텔	9	6.0	20	14.2	32	22.2
여관	0	0	31	22.0	57	39.6
콘도미니엄	26	17.2	1	0.7	22	15.3
친지 및 민박	4	2.6	2	1.4	8	5.6
기타	112	74.2	87	61.7	25	17.4
전체	151	100	141	100	144	100

6)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광객들이 이용한 식사방법은 아산을 제외한 유성과 수안보는 일반식당이 각각 64.5%와 53.5%로 높았으며, 아산은 기타가 51.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숙박시설 내 식당(29.8%), 일반식당(12.6%) 순으로 높았으며 유성은 일반식당 외에 기타(20.6%), 숙박시설 내 식당(11.3%) 순으로 높았다. 반면 타지역과 달리 직접취사는 응답되지 않았다. 수안보의 경우에 일반식당 이외에 숙박시설 내 식당이 2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7〉 온천 관광 시 식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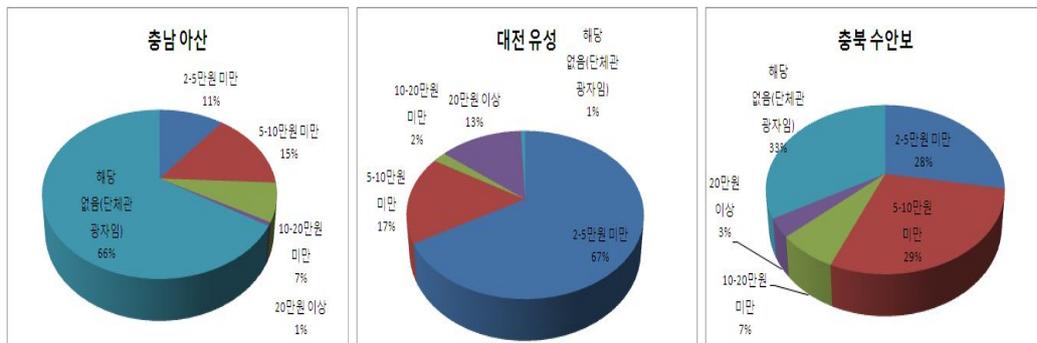
〈표 4-37〉 온천 관광 시 식사방법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숙박시설 내 식당	45	29.8	16	11.3	43	29.9
일반식당	19	12.6	91	64.5	77	53.5
직접취사	3	2.0	0	0	2	1.4
도시락	6	4.0	5	3.5	7	4.9
기타	78	51.7	29	20.6	15	10.4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7) 온천에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출하신 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온천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산과 수안보는 해당 없음(단체관광자)이 66.2%와 33.3%로 높았으며, 유성은 2-5만원 미만이 66.7%로 가장 높았다. 아산의 경우 단체관광자 다음으로 5-10만원미만은 15.2%, 2-5만원 미만은 10.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유성은 2-만원 미만 다음으로 5-10만원 미만이 17.0%, 20만 이상의 지출이 13.5% 비중을 보였다. 수안보의 경우 단체관광자 다음으로 5-10만원 미만이 28.5%, 2-5만원 미만이 27.8%로 각각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그림 4-38> 온천 관광 시 지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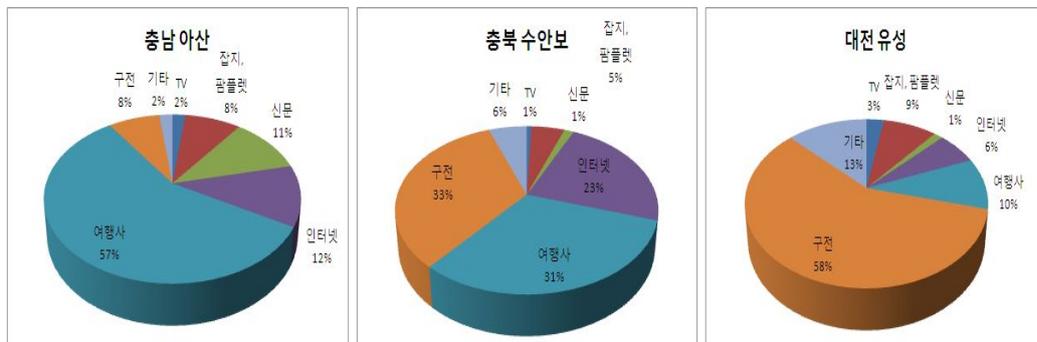
<표 4-38> 온천 관광 시 지출비용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2-5만원 미만	16	10.6	94	66.7	40	27.8
5-10만원 미만	23	15.2	24	17.0	41	28.5
10-20만원 미만	11	7.3	3	2.1	10	6.9
20만원 이상	1	0.7	19	13.5	5	3.5
해당 없음 (단체관광자임)	100	66.2	1	0.7	48	33.3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8) 귀하께서 이용하신 온천관광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온천관광지의 정보는 아산은 여행사가 58.3%, 유성은 구전이 58.2%로 높았으며, 수안보는 여행사와 구전이 31.3%와 33.3%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산에 대해서 여행사 이외에 인터넷(11.9%), 신문(11.3%) 등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었으며 유성의 경우 구전 외에 기타(12.8%), 여행사(9.9%), 잡지, 팜플렛(8.5%) 등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마지막 수안보에 대해서는 구전이외에 여행사(31.3%), 인터넷(22.9%)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9> 온천 관광지에 대한 정보습득



<표 4-39> 온천 관광지에 대한 정보습득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TV	3	2.0	4	2.8	1	0.7
잡지, 팜플렛	13	8.6	12	8.5	7	4.9
신문	17	11.3	2	1.4	2	1.4
인터넷	18	11.9	9	6.4	33	22.9
여행사	88	58.3	14	9.9	45	31.3
구전	12	7.9	82	58.2	48	33.3
기타	0	2.0	18	12.8	8	5.6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9) 귀하의 성별은?

성별은 세 온천관광지 모두 여성관광객이 남성관광객에 비해 많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산은 여자 66.2%, 남자 33.8%의 비율을 보였으며 유성의 경우 여자 63.8%, 남자 36.2%, 수안보는 여자 59.0%, 남자 41.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40> 응답자의 성별



<표 4-40> 응답자의 성별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남자	51	33.8	21	36.2	60	41.0
여자	100	66.2	90	63.8	84	59.0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10) 귀하의 연령은?

연령대는 세 온천관광지 모두 40-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아산의 경우 50세 이상이 64.9%, 40-50세 미만이 26.5%로 40세 이상이 91.4%라는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유성의 경우 50세 이상이 39.6%, 40-50세 미만이 34.8%로 40세 이상이 74.4% 비중을 나타냈다. 마지막 수안보의 경우 50세 이상이 43.7%, 40-50세 미만이 27.8%의 비율로 40세 이상이 71.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1> 응답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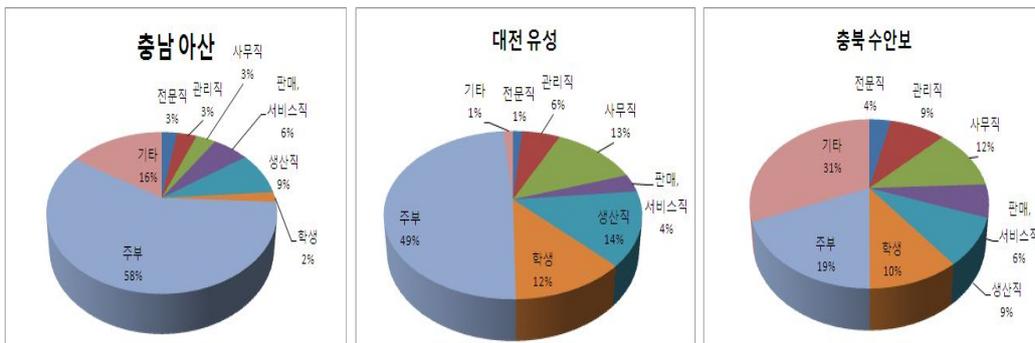
<표 4-41> 응답자의 연령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20세 미만	0	0	0	0	1	0.7
20-30세 미만	6	4.0	18	12.8	18	12.5
30-40세 미만	7	4.0	18	12.8	22	15.3
40-50세 미만	40	26.5	49	34.8	40	27.8
50세 이상	98	64.9	56	39.6	63	43.7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11) 귀하의 직업은?

직업별은 아산과 유성은 주부가 58.3%와 48.9%로 가장 많았으며, 수안보는 기타가 31.3%로 가장 많았다. 아산은 주부 이외에 기타(15.9%), 생산직(8.6%), 판매, 서비스직(6.0%)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성은 주부이외에 생산직(14.2%), 사무직(12.8%), 학생(12.1%)의 비중이 높았다. 수안보의 경우 기타 이외에 주부(18.8%), 사무직(11.8%), 학생(10.4%)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4-42> 응답자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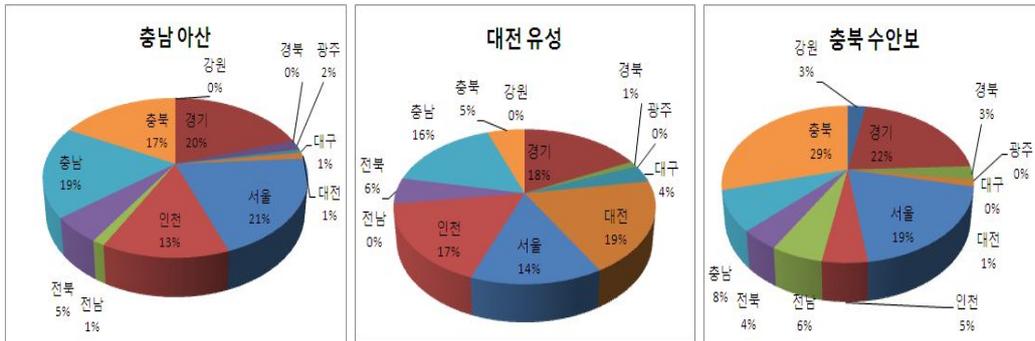
<표 4-42> 응답자의 직업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전문직	4	2.6	2	1.4	5	3.5
관리직	5	3.3	8	5.7	13	9.0
사무직	5	3.3	18	12.8	17	11.8
판매, 서비스직	9	6.0	5	3.5	9	6.3
생산직	13	8.6	20	14.2	13	9.0
학생	3	2.0	17	12.1	15	10.4
주부	88	58.3	69	48.9	27	18.8
기타	24	15.9	2	1.4	45	31.3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12)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관광객들의 거주지는 세 온천 관광지 모두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았으며, 충남, 대전, 충북의 충청권 지역의 관광객들도 많았다. 아산의 경우 서울(20.5%), 경기(19.9%), 충남(18.5%)순으로 관광객들이 많으며 유성의 경우 대전(22.7%), 경기(20.6%), 인천(20.1%) 순으로 관광객들이 많았다. 수안보의 경우에는 충북(29.2%), 경기(21.5%), 서울(19.4%) 순으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였다.

<그림 4-43> 응답자의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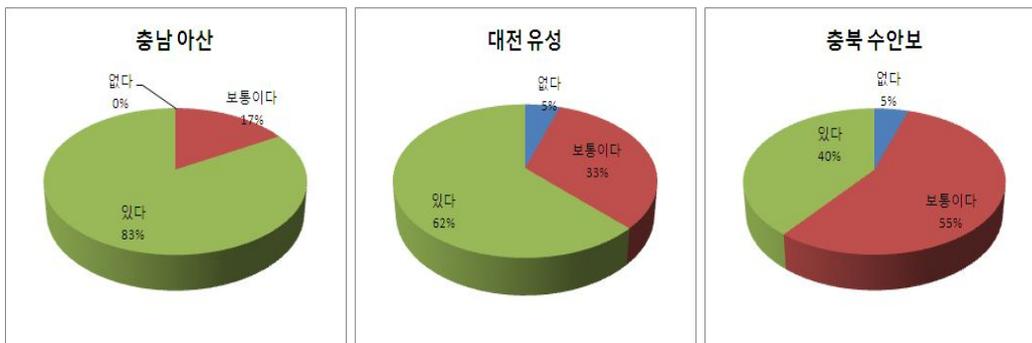
<표 4-43> 응답자의 거주 지역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강원	0	0	0	0	4	2.8
경기	30	19.9	29	20.6	31	21.5
경북	0	0	2	1.4	4	2.8
광주	3	2.0	0	0	0	0
대구	1	0.7	6	4.3	0	0
대전	2	1.3	32	22.7	2	1.4
서울	31	20.5	23	16.3	28	19.4
인천	20	13.2	3	20.1	7	4.9
전남	2	1.3	0	0	8	5.6
전북	8	5.3	9	6.4	6	4.2
충남	28	18.5	28	19.1	12	8.3
충북	26	17.2	9	6.4	42	29.2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13) 14)번의 질문항목들은 타 온천관광지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온천관광지와 비교하여 경쟁력에 관한 질문은 아산과 유성은 각각 83.4%와 62.4%로 경쟁력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수안보는 55.6%가 보통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아산의 경우 경쟁력이 없다 라고 한 답변은 없어 아산온천의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4> 온천관광지의 경쟁력



<표 4-44> 온천관광지의 경쟁력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없다	0	0	7	5.0	7	4.9
보통이다	25	16.6	46	32.6	80	55.6
있다	126	83.4	88	62.4	57	39.6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14) 14번의 항목들은 타 온천관광지와 비교하여 매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온천관광지와 비교하여 매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 온천관광지 모두 보통이다(아산 57.6%, 유성 56.0%, 수안보 59.0%)가 가장 많았다. 수안보의 경우 매력성이 없다라는 답변이 5.6%로 타 지역보다 매력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5> 온천관광지의 매력성



<표 4-45> 온천관광지의 매력성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없다	3	2.0	4	2.8	8	5.6
보통이다	87	57.6	79	56.0	85	59.0
있다	61	40.4	58	41.1	51	39.6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15) 14번의 항목들은 타 온천관광지와 비교하여 지역사회에 애착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온천관광지와 비교하여 지역사회에 애착심에 관한 질문은 유성과 수안보는 보통이다 라는 답변이 각각 51.1%와 50.7%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은 70.2%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4-46>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표 4-46>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구분	아산		유성		수안보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없다	6	4.0	7	5.0	13	9.0
보통이다	39	25.8	72	51.1	73	50.7
있다	106	70.2	62	44.0	58	40.3
전 체	151	100	141	100	144	100

제 3절 실증분석의 시사점: 문제점 및 협력방향

1. 충청권 경제협력 설문분석의 시사점

충청권 경제협력 설문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충청권의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권경제협약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답변자들은 충청권경제협약체의 출범과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충청권경제협약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과 협의체 출범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충청권경제협약체에 대해 알고 있었던 답변자들은 대부분 대중매체, 즉 TV나 라디오, 신문 등에서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정책차원에서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충청권경제협약체에 대해 홍보하고, 협의내용 및 협력방안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 동안 대전, 충남, 충북 등 3개 시도 지자체간의 경제협력 성과는 미미했으며, 각 시/도의 상이한 이해관계, 경제협력사업 로드맵 및 실천프로그램 부재 등은 충청권경제협약체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충청권경제협약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광역경제권 달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충청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 및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행정적-재정적 공동지원체제 구축해 실천가능한 공동협력사업 우선적으로 조기 실행이 충청경제협약체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청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공동추진하고, 충청권발전공동연구단을 통해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산학테트위크를 구축사업과 문화예술교류 및 관광협력사업 외에도 충청권광역클러스터구축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경제활성화 등의 사업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므로,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동추진방향을 설정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충청권 경제협력으로 인해 또 다른 경제력의 특정지역 집중현상 문제와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혜택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교통 및 상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정책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에 적은 농촌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온천관광협력 설문분석의 시사점

온천관광 설문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온천관광 협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3개 주요온천의 이용목적이 온천시설 이용과 가족, 친지, 모임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을 뿐, 회의장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략적 공동마케팅을 통한 이용목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온천이용횟수의 단발성 문제와 무박여행의 문제를 해결할 방문객 유인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성온천의 경우는 위치가 시내에 있는 관계로 가족단위의 방문이 많았지만 아산온천과 수안보온천의 경우는 단체방문이 많은 점을 미루어 보아 적절한 유인체계개발과 공동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온천관광지의 정보에 대한 설문에서 아산은 여행사가 58.3%, 유성은 구전이 58.2%로 높았으며, 수안보는 여행사와 구전이 31.3%와 33.3%로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3개시도 공동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관광객들의 거주지는 세 온천 관광지 모두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았으며, 충남, 대전, 충북의 충청권 지역의 관광객들도 많았다는 점을 볼 때, 마케팅 활동이 적극적이라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타 온천관광지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경쟁력(아산온천과 유성온천은 각각 83.4%와 62.4%)을 지니고 있고, 나름대로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겠다.

제 5 장

충청광역경제권 협력방안

제1절 대전·충청의 발전 방향

제2절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향

제3절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4절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제5장 충청광역경제권 협력방안

제1절 대전·충청의 발전 방향

1. 대전광역시의 도시개발방향

대전광역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지원하는 교육, 문화, 관광, 의료, 위락 등 다양한 배후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부권 최대의 교통 결절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국적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도시권 일원에 광역적 과학기술 벨트를 구축하고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혁신의 거점화를 유도하고, 대덕연구단지 일원의 유휴 토지 교외지역의 미개발 토지자원을 활용하여 산업 및 연구기능의 입지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을 도시개발 방향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둔산신시가지 고도화, 서남부권 신시가지 개발,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 동남부권 개발 등 권역별 도시개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엑스포 및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WTA) 주최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도시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 충청도의 발전방향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국토관리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서해안권 일대의 성장을 이끌어갈 거점도시권을 육성하고 있으며, 도시특성과 잠재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상가환경을 정비하고 소도읍 육성과 고도 옛모습 가꾸기,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중심도시의 개발로 주거수요 충족 및 도시적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 창출과 자연적 경관요소 보전을 위해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아산지역을 국내 전자·정보기기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서산과 당진

지역의 생산기반과 천안지역의 R&D 기능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도시개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제2절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향

대전과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향은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간의 재편성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공동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복도시, 대전, 청주, 천안의 공간균형으로 국토중심권의 공간을 정비하고,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중심거점(Strongholds)을 육성시켜야 한다. T자형 공간구조를 보어나는 남부, 서남해안, 동북부축의 개발을 정비하고, 충청권 동서간선축의 강화와 호남고속철을 비롯하여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충청권 광역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을 특화하는 것이다. 대전을 IT-BT 중심의 R&D 거점으로 하여 천안·아산, 청주·청원, 오송·오창을 스포크형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원에서 전략산업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해, 대전은 기술개발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남북은 첨단기술-생산연계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충청권 첨단기술벨트조성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해 3개 시도 접경 지역에 창업연계벤처기업 생산단지를 협력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전국으로부터 유입인구가 작아지게 되고, 그만큼 대전, 충남북 주변 인구를 흡입하는 기능을 하여 충청권 주변지역은 공동화 가능성이 있다. 내재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유입인구를 15만명(30%), 자족적 유입인구 35만명(70%)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유입인구와 자족적 유입인구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여 각각 25만명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복도시의 설립요건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범위 및 시·군 상호간의 기능 등 역할을 정립시켜야 한다.

넷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청주공항 기능을

특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 국제노선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행정중심복합도시~오성~청주공항간 고속화도륙/BRT건설 추진을 비롯한 청주공항과의 간선교통망 체계를 확립하고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청주공항과 지역개발 연계를 배후지역 공동개발 및 관세자유지역을 지정 추진해 강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충청권발전 특별법의 제정 등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도시, 대덕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연계하는 충청권 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 충청권 경제협의회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 수도권에 대한 공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촉진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지구, 신활력지역사업, 소도읍육성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등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제도 활용으로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충청권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 문화, 역사, 관광교류 등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충청권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 시행

광역경제권의 형성은 지역의 재생산구조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광역적 차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간, 제조업간 연계관계, 기술 수요와 공간, 시스템적 연계, 각종 인적자원의 상호연계, 대학의 지적 자산의 사업화를 위한 매개체확대, 상호상습문화 등이 지역경제전체와 연계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구조화될 때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출연연구원의 공동연구에 의한 충청권 지역에 대한 공동산업지구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광역경제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충청권 공동 투자에 의한 시범지구 지정

충청권 광역경제권 형성은 충청권 경제통합의 효과와 비전을 위한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외생적 요소와 내생적 요소를 결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화시대에 도래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개발욕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구축으로 개발절차의 민주화도 필요하며, 공동발전을 위해서 실천수단 확보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청권 지역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구체화하고, 실현화를 위해서는 충청권 공동발전전략과 지역협력사업 및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제도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협력 및 제휴방안과 실천수단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3개 시도가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수단을 제시하며,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모형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충청권을 국가발전선도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간 기능보완 및 협력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체계구축,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충청권 경제협의체의 실질적 역할수행

수도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수도권의 철회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청권은 지리학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허리부분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인근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과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공동 발전을 위해 이미 구성된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하여 미래여건과 지역성에 맞는 잠재력을 일궈낼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먼저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기반구축에는 재정을 투자하고, 수익사업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공항, 항만, 도로 등 주요 인프라와 융합산업단지 조성, 성장거점축진지구 조성, 의료특구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반조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조세감면, 개발사업 지원, 고용 및 노사환경 개선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교육, 관광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덕 R&D특구, 오송바이오벨리,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역할분담 및 상호 연계성을 통해 상생과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등 지역내 여타 발전프로젝트와의 차별화 및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산업기반,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시각에서 단계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충청권 종합발전 구상의 안정적 추진기반으로서 「성장거점 축진지구 특별법」(가칭) 제정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권이 공동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은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광역경제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선도프로젝트의 조기 실현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도권에 과밀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위치는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일원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이며 편입면적은 연기 184.64km², 공주 76.62km², 청원 33.42km² 등 예정지역 72.91km²과 주변지역 223.77km²로 총 296.68 km²이다. 9부 2처 2청 등 31기관 등 중앙 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17기관 등의

이전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24년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계별 인구 수용계획은 초기활력(‘17~’15) 15만, 자족 성숙(‘16~’20) 30만, 완전(‘21~’30) 50만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설비용은 2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5-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조원)

구분	초기 활력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완성단계	계
	2007~2015	2016~2020	2021~2030	
계	14.16	4.33	3.21	21.70
정부부담(’03 불변 기준)	5.96	1.83	0.71	8.50
사업시행자 부담	8.20	2.50	2.50	13.20

2005년 3월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0월에는 중앙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확정고시되었으며 2006년 1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하였고, 2007년 7월에는 기공식이, 2008년 2월에는 중앙 행정이전대상기관이 정부조직개편으로 9부 2처 2청 등 31기관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기본계획상 2009년말에 행정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있을 계획이며, 201년부터는 중앙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은 대전과 세종, 오송(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망으로 교통망 구축을 통해 거점 지역간 30분내 연결 및 기능적 연계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치는 대전역~신구교~세종~오송에 이르는 구간이며, 규모는 대전구간 21.6km를 포함해 연장 46km이며, 청주국제공항까지는 65km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대전역에서 세종시 경계까지 21.6km에 이르는 구간에 신설 14.1km와 개량 7.5km에 4,510억원을 포함, 5,165억 원으로 청주국제공항까지는 8,853

역 원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주체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광역교통과와 도시광역철도과, 그리고 대전·충남·충북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세종~오송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세종시 주변의 부족한 광역철도 인프라 공급을 하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08년 2월 대전·충남·충북 등 3개 시도 제 20회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방문건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2008년 5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수정건의 하여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었다.

3.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

제2경부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를 절감하고, 충남 내륙관통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속하면서 기 추진중인 용인~연천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건설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위치는 행정도시에서 천안을 거쳐 용인까지 이며 사업량은 L 42km와 B 23.4m(4차로)이며 총사업비는 2009년 기본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된 국비 1조 4,2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중앙정부 즉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주체가 된다.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08년 국토해양부에 의해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통해 행정도시와 수도권 접근성 강화 및 직결노선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4.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를 절감하고, 서천~공주, 대전~당진, 청원~상주와의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며, 도·농 복합형 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위치는 홍성군 광천에서 평택에 이르는 서해안고속도로로 사업량은 L 66km, B 23.4m(4차로)이며, 총사업비는 09년 기본설계비 10억이 반영된 국비 1조 3,650억원으로 예상된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이며,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주체이며, 국토해양부에 의해 2008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도청 신도시·내포문화권·수도권과 연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낙후된 서해안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서해선 물류철도 조기착수

서해선 물류철도 조기착수는 남북방향 철도수송을 경부 단일축으로 운영하여 수송능력에 한계에 봉착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남북간 수송로 조기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개성~신의주를 거쳐 TCR/TSR(중국, 러시아)과 연결되어 새로운 교역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치는 충남 홍성군(화양)에서 경기도 안산시(원시)에 이르며 북선전철로 90.18km에 이르는 사업량에 서해안 물류수송망 확충을 위한 '09년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총 2조 8,304억원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까지로 국토해양부에 의해 추진된다. 1999년 12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에 의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07년 11월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서해선 물류철도 조기착수를 통해 전라선과 연결하여 경부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해안축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신산업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 및 경기 서부 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포화상태에 도달한 경부선 철도의 수송수요 부담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은 포화상태인 수도권 분산기능의 시급성 및 중북부 지역의 산업물자수송 및 충주호, 소백산, 월악산을 연결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중부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격자형 교통망 구축으로 내륙 물류 중심의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위치는 안중~음성~제천~삼척(충북 진천 만승~제천 송학)에 이르며 사업량은 충북 75.6km를 포함해 L 222km, B 23.4m(4차로)이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조 8,834억원이며 추진주체는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이다.

<표 5-2>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상황

재원구분	총사업비	2007까지	2008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량	진행사항
				2009	2009이후		
계(국비)0	18,425	535	1,125	2,400	14,365		
음성~충주	7,180	416	1,080	2,200	3,484	45.4km	공사중
충주~제천	11,245	119	45	200	10,881	23.9km	실시설계

※ 안중~삼척 구간중 음성~충주~제천 구간 사업비 증액 요청

안중~삼척 구간중 음성~충주~제천 구간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증액하여 조기건설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초 건의 예산액으로 반영하여 사업조기 완공 및 동서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당초 2009년도 예산 건의 결과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음성~충주 구간’ 2,200억원 중 637억원만 반영하고 충주~제천간 실시설계비 2000억원은 전액 삭감을 검토중이다.

제4절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1. 충청권 공동추진 협력사업

1) 기 추진사업

충청권 벤처프라자는 년1년 개최되는 '02년부터 충청권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 및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07년에는 65개 업체에서 90부스가 참여했으며, 충청권 해외마케팅 공동참가 및 해외사무소 공동 활용 사업은 대전의 남경사무소와 충남도의 상해무역관 전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07년 7월에는 중화권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으며, '07년 10월과 11월에는 (동)유럽시개단 등 6회에 걸쳐 공동 참여했다. 충청권 IT클러스터 구축사업은 '07년 11월 충청권 IT클러스터 기술사업교류회를, 12월에는 IT클러스터 2차 교류회를 개최하면서 진행되고 있고, 청주공항활성화 추진 사업은 청주공항활성화 재정지원조례를 제정중이다. 충북은 '07년 3월, 대전은 '07년 9월, 충남은 아직 제정중이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은 '04년 3월에 시작된 사업으로 충청권 해외 공동상품 판촉전을 개최하고 공동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진행중에 있으며, 산·학·연 우수성과 발표회는 대전, 충남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07년에 개최하였고,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은 '07년 6월에 충청권 생활체육 동호인 1,000여명이 참가해 축구 등 8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08년은 충북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전 인근 시·군 G9프로젝트 추진사업은 대전과 대전 인근의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26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G9(9개의 Group)는 대전광역시, 보은, 옥천, 영동,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이다. 그리고 행정도시와 연계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 계획중인 사업

충청권 연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개 시도 접경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형태의 창업 자유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장기적 검토단계에 있으며, 지능형 무선 지역 센서망 및 통신장치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충청권 공동사업으로 총 예산은 38억이다. 외국 바이어가 많이 참여하는 세계한생대회에 충청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획중이고,, 충청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과, 충청권 안경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안경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후 공동출자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별로 운영하는 지역상품 쇼핑몰을 통합하여 충청권 우수상품 홍보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3) 기타 공동협의중인 사업

기타 공동협의중인 사업으로는 충청권 예술단 상호교류, 충청권 관광공동마케팅 추진과 충청권 공무원 교육훈련 협의회 구성운영('08부터 특화교과 분담), 충청권 지역에너지사업 관련 협의 등이 있다.

<표 5-3> 충청권 공동추진 협력사업	
기 추진중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 충청권 해외마케팅 공동참가 및 해외사무소 공동활용 ○ 충청권 IT클러스터 구축 ○ 청주공항활성화 추진 ○ 충청권 관광진흥협회의 운영 ○ 산·학·연 우수성과 발표회 ○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개최 ○ 대전 인근 시·군 G9프로젝트 추진 ○ 행정도시와 연계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계획중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연계 첨단산업단지 조성 ○ 지능형 무선 지역 센서망 및 통신장치 제품화 기술개발 ○ 세계한상대회 충청권 공동참여 ○ 충청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충청권 안경과학 클러스터 구축 ○ 충청권 우수상품 홍보 홈페이지 통합운영
기타 공동협의중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예술단 상호교류, 충청권 관광공동마케팅 추진 등 ○ 충청권 공무원 교육훈련 협의회 구성 운영 ○ 충청권 지역에너지사업 관련 협의 등

2. 충청권 시범사업

충청권 시범사업은 충청권 TP가 공동발굴한 사업으로 2008년 8월 24일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다.

1) 글로벌 통합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글로벌 통합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신약 개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임상-생산-판매 등 바이오산업 가치사슬단계별 국내 취약분야의 패키지형 인프라 확보 및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태임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었다.

글로벌 신약 leading compounds와 선도 기업 육성 하여 2012년까지 국내 60%, 글로벌 5%의 시장점유율과 직접적인 고용창출 1,000여명, 간접적인 고용창출 5,000여명을 목표로 충청권 신약 스크리닝 플랫폼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HW 350억, SW 450억으로 총 800억원으로, 2009년에 350억원, 2010년에 250억원, 2011년에 200억원 등 국비로 집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글로벌 통합 신약 스크리닝센터 구축,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글로벌 스크리닝 지원, 플랫폼 기술 및 질환별 신약 스크리닝 사업 운영, 글로벌 제약 기업과의 공동 신약 개발, 국내외 신약 개발 분야 네트워킹 구축 사업 운영, 신약 개발 핵심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신약 개발 기술 기업 지원 워크숍 운영,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와의 신약 공동 개발 등이 있다.

신약후보물질 30건, 비임상 20건, 기업지원 공동 연구 30건의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신약 개발 신기술 지원 서비스 및 신약 개발 사업화로 국내 시장점유율 60% 달성, 글로벌시장 5% 점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식경제부 산하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와 연계하여 신약 스크리닝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국제적 전임상/임상시험센터와 전략적 제휴로 사업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IT부품소재 비즈니스 허브 구축

IT부품소재 비즈니스 허브 구축 사업은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 클러스터화 전략과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클러스터로 구축하여 상호 호혜적 이익을 창출 및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성장 전략의 필요하게 되었고, 충청 광역경제권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한 IT부품소재 기업의 집적화와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주력산업 등 전후방연관효과 창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사업은 충청권전략산업기획단과 충청 IT클러스터 협의회가 추진주체가 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H/W 264억원, S/W 690억 소요 예정으로, 2009년에 306억, 2010년에 351억, 2011년 287억 등 총 944억원이다.

주요사업내용은 IT부품소재 산업의 국제협력 강화, IT부품소재 연구개발, 통합기술지원서비스, 맞춤형 인재양성 등이다.

IT부품소재 비즈니스 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형 대덕 R&D특구와 첨단 기술-생산연계형 집적지인 천안·아산, 청주·청원지역을 연계한 세계적인 IT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충청권 IT부품소재 산업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통해 국산화율 50% 이상, 세계 핵심기업 25개사 이상, 기업집적화 150개사 이상 및 수출액 25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간접적인 효과로 IT부품소재 산업의 성장을 통해 태양전지 산업 등 신성장 산업 창출로 고용증대 및 성장 시너지 극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충청권 태양전지산업 글로벌 성장거점화 구축사업

태양전지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국내 태양전지산업의 기술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충청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기반이 우수하여 태양전지산업과 연계 활용으로 높은 시너지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의 태양전지 생산규모는 국내 총 생산능력의 약 65%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성장거점화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은 충청권전략산업기획단과 충청 태양전지산업 육성사업단이 추진주체가 되

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고, 사업비는 H/W 480억원, S/W 501 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9년 304억, 2010년 397억, 2011년 280 등 총 98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요사업내용은 태양전지산업 성장거점인프라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태양전지 부품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지원, 태양전지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양전지 전문인력양성,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충남(소재)-대전(웨이퍼/잉곳)-충북(셀/모듈)의 태양전지 가치사슬 구조 연계에 따른 시너지 극대로 국내 태양전지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충청권 태양전지산업의 성장거점 구축으로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통한 국내 시장점유율 80% 달성 및 연간 1조 2천억원 수출규모로 글로벌시장 10%를 점유가 기대된다.

3. 충청권 공동발전 구상사업

1)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은 3개 지역별로 분산되서 형성된 산업집적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별로 추진 중인 DB구축 등의 연계를 통해 공동의 자원이용이 가능토록 하게 하며, 통합경제권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노력을 전개해 상생발전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추진전략으로는 집적기반의 강화,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육성, 역외 투자 및 기업의 공동유치,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문화의 확산,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 등이 있다.

(1) 집적기반의 강화

① 기존산업단지 정비 및 고도화 추진

충청권은 기존 공단을 정비하여 혁신클러스터로 고도화하고, 전략산업별 집적지구를 설정하여 연관산업별로 집적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단계에서는 대전 및 청주, 천안의 산업단지 등 도시내 기존공단의 첨단·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망의 우선 구축 및 주요 산업단지내 기업정보화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추진한다.

2단계에서는 산업단지 첨단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별로 집적지로 육성한다. 천안·아산~청주·청원간 생산연계벨트를 통해 IT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청주공항으로의 항공물류를 강화하고 IT와 BT가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반도체장비, 전자정보기기 산업 집적을, 청주·청원 중심의 의약품, 생명산업, 기타화학물의 원부자재 확보 및 생산·공정과정에서 보완·연계 가능하도록 중규모 산업집적으로 형성해 가기 위해 관련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집중 육성하여 첨단기술벨트(highway valley)를 구축한다. 그리고 대덕~행정도시~주변지역간 첨단산업벨트를 통해 R&D특구 인접지역에 국제업무 및 비즈니스업무를 담당하는 500만평규모의 집적지구(국제비즈니스스마트타운)을 건설하여 R&D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변지역에 첨단 산업 물류, 첨단 국방 산업, 기계 제조업, 생명화학 산업별로 업종별 분산 집적을 유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중규모 집적의 연결을 강화하여 단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제비즈니스 스마트 타운 조성

국제비즈니스 스마트 타운은 국제비즈니스타운과 생산시설을 복합한 복합산업집적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500만평 규모에 달한다. 이는 충청권 내에 부족한 국제

화 지원시설을 보강하고, R&D 특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전시컨벤션 센터,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건설하여 R&D 특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기능 등 국제업무기능을 확충하고, 비즈니스 기능, R&D 기능, 산업기능이 복합된 신개념 산업단지로서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다국적기업 및 국내 유명 대기업의 본사 및 지사,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법인세감면 등 행·재정 지원을 한다.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일랜드식 외국 기업 유치팀 결성하고, 언어나 교육,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외국인 거주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 및 외국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도로교통표지판, 행정서류 등의 외국어 번역 및 통역, 관광안내소의 설치, 외국기업 대응팀의 설치 등과 같은 국제화 행정을 시행하고, 국제화 교육을 통해 지역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 정보제공시설 또는 외국 문화관을 운영하고 외국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출입국제제도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R&D특구, 오송바이오밸리를 연계한 발전이 기대된다.

③ 의료 스마트타운 조성

의료 스마트타운 조성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약의 처방과 신규 치료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특구를 조정하고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200만평 정도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 통해 연구소-임상기관-제약기업-의료기기업체-병원 등 「의료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의 유치와 연구개발·주거·교육 인프라 및 휴양·관광시러과의 연계 및 임상시험 전문병원을 설립하도록 한다. 의료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및 특례도 인정된다. 신약의 처방과 신규 치료행위에 대해 규제의 완화, 의료기관 설립 제한 완화,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설립주체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내용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복지부장관 허가로 의

료기관 개설 가능,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사는 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종사 가능,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적용 배제 등이 있다.

의료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① 지역간 인력·연계 시스템 구축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충청권내 기초분야의 지식 및 기술 관련정보(know-why, know-what)의 공급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며,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는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현장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생산기술관련 지식의 공급기능(know-how)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간 지식의 상호교류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동종·이종간 광역교류회(IT, BT, NT, IBT 등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회의나 세미나 등을 정례화함으로써 기초지식분야 및 경험지식분야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특히 교류회에서는 기술관련 세미나를 확대하고, 세미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광역교류회는 연간 또는 분기간 일정표를 가지고 운영하며, 세미나의 대상기술은 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현상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IT, BT, NT, IBT 등 충청권 전략산업에 대한 로드맵(TRM)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충청권의 중소기업지원기관의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원기구간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보공유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청권 기업의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권 기업의 발전전략의 수립, 국내외 사업기술, 인력교류, 수범사례 연구, 국내외 특허동향, 투자정보 조사 분석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프로젝트의 추진 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광역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내 대학과 연구소 등 관

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및 산업계의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풀(pool)제를 도입하여, 충청권내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전문기술분야의 인력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및 산업·기술분야의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 네트워크 중개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의 인력풀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에 따라 분산된 인력풀 제도의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교수, 지역산업계의 대표, 정부기관 등 명망가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설비·기자재의 지역공동활용체계 구축

충청권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고가기자재들은 규모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개별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지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장비를 지역기업이 공동활용이 용이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청권 고가기자재 공동활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기관별 고가장비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되, 대외개방시 손·망실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기반으로 고가장비공동활용회를 구성하고, 장비의 훼손·분실 등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고가설비 수요를 조사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기의 경우 대학, 연구소 및 기타 산업지원 관련기관의 구입에 대한 지원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점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추진사업에 의해 구입된 각 대학 RIC 등에 소재된 고가장비 중 단독 유지보수가 어려운 장비들을 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중점기술개발지원센터에 집적시키고, 중점 관리하여 장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 충청권 산업정보망 공동구축

충청권내 기업간 협력과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종합산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용해야 한다. 산업정보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고가기자재, 기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기업간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충청권 산업정보망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협회나 대학 등 민간부문 중심으로 구성·운영하여 정보활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분야별 전문 산업정보망 구축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산업정보망은 지역내 기업정보망, 인력정보망, 지원정보망 등으로 정문화하여 구축하며, 기업간 기술·생산, 판매연계를 촉진하고, 지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주도의 산업정보망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정보망은 기초정보 및 부가가치 정보를 공급하게 되므로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므로 민간경영에 의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단, 초기 단계에는 수익성이 취약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산업정보의 표준화 및 충청권 통합 경제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내 다양한 산업정보산업의 육성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정보의 표준화 및 호환성을 강화 지원할 것이며,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내 기업간 원·부자재구매, 기술 및 생산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 전자상거래망(B2B) 구축지원을 강화시켜야 하며, 기업의 e-business화, 전자상거래, 사이버 무역관련 컨설팅, 직원교육, 전문가 양성 종합적 산업정보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그리고 충청권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정보, 전자상거래 관행의 확립, 그리고 거래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제품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

④ 통합기술이전체계의 구축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능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역내 기술이전체계 확립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판단하고 기술소유자와 수요자의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중개자(벤처캐피탈)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광역적 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신기술 정보, 신기술도입 및 확산, 신기술 활용 등을 지원하는 충청권 통합 TLO(Technology Liason Office) 구축해 현재 각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TLO가 단독으로 생존가능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함에 따라, 이를 충청권 전체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전문가(기술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충청권 기술이전센터를 3개 시도 공동출자 및 중앙정부 지원으로 공동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기술센터는 기술개발, 신기술도입 및 이전지원 역할과 함께 지방기업의 기술개발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운용 및 기술개발지원 시설과 지원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동시에 구비하여 지역혁신의 선도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동기술개발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현재 각 지자체 예산 중 연구개발비 규모의 확대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육성

충청권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통신 및 첨단기술 등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중소규모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제고시켜야 하며, 정보·통신, 첨단기술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

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① 거점지역별 창업기반의 확충

충청권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창업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이므로 창업의 열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적으로 미비된 창업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를 공동 개발하여 그 중 효과가 ENIdisks 서비스를 충청권 전체 BI에 확산시키고, 현재 인큐베이터와 관련된 기능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보육센터, 인터넷보육센터, 산업자원부의 TBI사업(신기술보육),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정보통신산업 보육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그 외에도 TP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대학이나 관련기관들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인큐베이터 건설지원책을 지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시설을 요하지 않는 IT기업유치를 위한 빌딩형 BI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포스트 인큐베이터의 공간을 확충하여 창업기간 완료후까지 지역내에 정착하지 못하는 기업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해 창업인큐베이터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청권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충청권 공동 벤처 펀드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충청권 중견기업육성 연계체계 구축

충청권 중견기업육성 연계체계 구축은 지역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 및 기구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지원 부문, 디자인, 기술·생산관련 지원 전문, 공장확장 인허가, 재정 금융, 주식시장 등록,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상호 연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체계의 구축이 그 주요내용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체계는 기술혁

신, 신기술도입,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대덕연구단지, 지역내 대학, 정부기관 등을 연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말한다.

먼저 충청권내 자치단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지원기구간 정보공유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청권내 중소기업지원체제의 강화와 통합적 지원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기관간 지원서비스, 지원전략, 지원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단위 지원 및 전략적 합의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육성은 시도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소위 「스타기업 육성」의 제도화·체계화를 통해 시행하고 스타기업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산·학·연이 결정하는 선발체계와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 관·학·연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역외 투자 및 기업의 공동 유치

① 기업 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감소시키고 수도권내 대기업을 지방이전의 적극 추진을 제시하였고 이에 충청권은 이전대상 기업의 일차적인 대안입지로 검토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이전입지를 희망하는 업체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입지기반 정비와 3세 가도의 협력 하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 전략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은 대부분 국내 기업과 다른 경영기법을 지니고 있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계 내에 새로운 경영문화의 전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기 개발된 산업단지나 개발 추진 중인 단지 일부구역에 추가로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기업의 유치홍보를 위한 지역마케팅(place marketing)를 추진하도록 한다. 수도권 및 해외기업의 활발한 유치를 위하여 공동의 지역마케팅을 실시하고, 특히

시·도별 전략산업의 특화지대로 상징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지역마케팅을 추진한다.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삶의질 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고,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임대료, 문화시설, 전기 및 상하수도시설, 교육시설 등이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전시장 설치·운영, 그리고 수출진흥을 통한 지역제품의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한다.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차원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수요지향적 교육·훈련(customized training/education)제도 구축을 통해 교육훈련의 실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수요에 따라 추진하며, 이외에 지역대학내에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수행할 훈련프로그램 개설 등의 협조도 요구토록 한다.

이전기업 지원시설 기반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육성시설과 기반을 중앙정부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확대하고, 이를 이전기업이 용이하게 활용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보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도 도입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 확보를 위한 장기저리의 자금원을 확보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배분시 이전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이전기업의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고용창출력 및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원의 종류와 정도를 차등화하여 선도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전략산업분야의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 등을 포함하여 외국투자기업 지원수준 이상의 파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기업의 충청권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추진하되 우선구매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충청권 국제경제교류 촉진 공조체계 구축

충청권의 국제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촉진 및 통상업무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전략 산업의 선정 및 상품개발지원, 수출대상국별 마케팅 전담제 등 전략적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자치단체별 수출진흥활동의 공조를 위한 해외사무소 공동설치 및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공동파견, 해외바이어 공동초청, 국내외 전시·박람회의 공동개최, 교역전문인력 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충청권의 수출촉진 공조활동은 단기적으로 협의체 형식으로 추진하되 전문성의 확보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수출촉진전문기구(충청권 무역투자공사)로 설치·운영한다.

충청권 수출촉진 공조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지사 직할의 추진력을 지닌 충청권 수출촉진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진흥 공동전략, 공동진흥시책의 추진을 협의토록 한다.

충청권내 농산물의 수출촉진, 상품개발지원,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개척 및 수출촉진과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권 무역투자공사를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충청권 수출진흥기구는 자치단체의 공동출자 및 정부지원(중앙정부 수출지원기구)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며, 지자체의 국제교류 전문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또 기존의 자치단체 국제교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소단위 핵심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실적과 필요에 따라 확충하도록 한다.

(5)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문화의 확산

충청권내 인접지역간 보완·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산업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문화 확산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은 산업군집 형성과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간 네트워크는 공식적 제도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문화의 산물이며,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별기업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의 형성은 동태적인 인적 교류와 인식공유, 협력효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의 확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전략 추진은 준비단계와 초기형성단계, 활성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가, 과학자, 발명가, 전문가, 공부원, 투자자간 상호협력과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에 치중한다. 초기형성단계에서는 지역대학 및 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 중심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과학자, 발명가, 기업인, 투자자, 창업 지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간의 만남과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공식 및 비공식 교류기회를 확대한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및 창업 아이디어 발표회, 전시회, 창업 투자 설명회, 상설 테크노마트, 분야별 포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의 상품화 및 기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표 5-4> 지역산업네트워크 형성의 추진단계

1단계	동기부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기업군을 확인하고, 네트워크의 이익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단계 ○ 집단내 리더의 출현을 지원
2단계	전략적 계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의 문제와 기회 분석, 공동의 사업계획 작성 ○ 그룹 구조 및 조직체계 결성 단계
3단계	시범사업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들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 전시회 공동출품, 원자재의 공동구매, 상품 카탈로그 공동제작
4단계	전략 프로젝트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간 생산공정의 전문화 추진 ○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공정 및 제품 전문화, 기업 신설을 통한 공동시설의 공급, 공동 브랜드의 개발 등 추진
5단계	네트워크 구축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등 네트워크 중개자의 존재 불필요 ○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구현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업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마련하고, 여기서 적용대상은 개별사업 보다는 동종산업간 광역교류협의회 구축, 광역이업종 교류회의 구축과 같은 교류기반 확충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상호간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여 네트워킹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한다.

네트워크의 결속력은 지역차원의 미래Vision을 제시하는 First Level Influencer와 기업간 이해조정과 협력기회 제공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Second Level Influenced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Influencer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근본목적은 동종 및 이업종 산업내 기업간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완·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측면에서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는 연관산업 육성, 창업 등 기업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충청권내 유망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지역별 전략산업간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광역적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이업종 교류회」의 결성을 통하여 정보교환,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회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부문의 정보가 지역간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소간 네트워크 구축은 전략산업만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도 매우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지역대학의 주요거점 연구소를 상호연계함으로써 설비의 공동이용이나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내 기업간의 네트워크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전시회의 공동 출품, 공동 마케팅, 공동기술 개발 등 지역내 기업간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적용, 소요자금의 일부 보조, 저리자금의 융자 등의 다양한 재정지원과 함께 기업간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을 위한 각종 기술 및 마케팅포럼(forum)의 개최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2) SOC의 협력적 구축

① 광역물류거점시설의 확충

대전, 청주, 행정도시, 공주 등으로 구성된 광역권은 충청권 인구의 약 2/3 거주하는 권역으로 주요한 화물 발생지역이므로 광역물류거점시설 확충 사업은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권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단위물류시설-광역거점시설-국가물류시설(청원, 양산 등)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회덕 IC 인근) 위치에 총 15만평 규모로 지역간 육상 화물 및 광역권 물류의 집배송 기능할 예정이다. 2008년까지 대덕특구 개발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2011년까지 북대전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② 대전~행정도시~청주간 연계 도시철도 구축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청주와 대전은 각각 공항접근,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고차서비스 제공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들 도시 간 통행의존성이 높아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의존성을 높여 광역교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성 높은 철도교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전~행정도시~청주축의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될 것이다.

이 사업은 도시철도(경전철)사업으로 추진되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고속철도역), 청주국제공항이 주요 경유지이고, 대전에서 행정도시까지 13.6km가 1단계 구간으로, 행정도시에서 오송역, 청주공항에 이르는 30km가 2단계 구간으로 연장된다.

타당성 검토는 충청권에서 공동추진하고,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충청권 공동으로 건의)되며, 2007 충청권 대선공약과도 연계되어 추진 계획중이다.

③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현재 충청권을 관통하는 경부, 호남선의 전철화는 완료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개통(2008), 호남고속철도의 개통(2015)으로 철도의 여유용량이 발생했다. 특히 호남선 구간은 전체 약 80%의 여유용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따라서 전철과구간에 역사 및 전동차 투입만으로 광역전철기능이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유지는 논산과 서대전, 신탄진, 조치원, 오송 등이며 논산에서 가수원까지 39km, 가수원에서 신탄진 21km, 신탄진에서 오송역까지 30km 연장이 주요 내용이다.

타당성 검토는 충청권에서 공동추진하고,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충청권 공동으로 건의)되며, 2007 충청권 대선공약과도 연계되어 추진 계획중이다. 1단계 가수원에서 신탄진까지 21km, 2단계 논산에서 가수원, 신탄진에서 오송역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2010년에 1단계 착공될 예정이며,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④ 호남고속철도 간이역 설치

호남고속철도의 호남권, 충청남부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용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호남고속철도의 운영적자폭 증가는 결국 운영횟수의 감소와 기존 서대전역으로의 변칙운영이 불가피 함에 따라 국도 1호선과 교차하며 장래 행정도시 연장도시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간이역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호남고속철도 경유지인 행정도시 인접지역에 중간역을 설치하며, 위치로는 충남 연기군 남면의 용포리 일대가 될 것이다.

2007년 대전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건의 되었으며, 2008년에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2015년에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준공될 예정이다.

3)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①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장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확충은 세종시 국제화 기능 수행과 화물계류장 미확보로

인한 항공기 계류 및 화물처리 문제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시기(2012)에 맞춰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고, 공항개발증장기종합계획 등 정부계획을 반영한다. 기존 5기의 계류장을 11기로 , 기존 2기였던 로딩브리지를 7기로 확충·신설하고 유도로를 2개소로 신설하며 기존 2,740m였던 활주로를 860m 확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거점공항으로의 육성과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청주국제공항 수요창출 및 시설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공항 접근성 개선 및 공항 CIQ 정비 등 공급시설 등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확대

국제노선 확대는 일본·동남아 등 근동 항공노선 개선을 통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 국제화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아시아를 연계하는 특화노선으로 일본/동남아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타킷 노선을 선정하고, 충청권 3도 공동으로 일본 구마모토현 노선개선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민관 합동 유치단과 함께 중앙정부, 국내외 항공사 등을 방문해 활동전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주~중국간 노선을 개발하여 청주~중국간 사용할 수 있는 노선 운수권을 확대 추진하고, (주)대신정기화물을 통해 청주~중국간 화물전시 취항과 충청연합투어를 통해 다변화된 중국특화노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항시설 확충 및 국제노선 증설로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과 함께 중앙정부, 국내외 항공사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육성

충북의 관광산업 및 세종시 건설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홈베이스 이전 혹은 제2 베이스 구축 유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생항공사의 발굴 및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의 수요내용으로는 저가 항공사(LCC) 활성화 및 화물운송 지원책 강화와 민간항공전용공항으로 육성 등이 있다. 기존항공사의 홈베이스 청주 이전 또는 제2 베이스 구축을 유도하고, 신생항공사 지원으로 청주 홈베이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청주 홈베이스시 운수권과 호혜적 교환 등을 통해 외국항공사와의 운항 자유화를 추진하고, 항공사별 마케팅을 공항공사 청주시사와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침단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 수송에 따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군 공항을 이전하여 민간항공 전용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 도민의 항공교통편의 제공과 다양한 항공이동 수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사업은 근동 항공노선 개설을 통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특송업체 유치를 통해 물류집산기능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4대 특송업체보다는 아직까지 공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 특송업체 유치가 특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대 특송업체보다는 중소 특송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 대상업체들로는 「에어본」 등 20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지역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일본시장의 온라인카고서비스(OCS)와 중국시장의 스카이킹과 ACI 등이다. 중국과 일본시장을 목표로 하는 업체일 경우, 정기노선만 확보되면 진출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배후권역에 근교농산물 수송 및 수도권 남부 및 충남 북부권역의 경박 단소형 화물수송시 집배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제3차 중기교통

시설 투자계획과 2011년 제4차 공항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⑤ 동서5축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청주공항은 중부고속축에 접해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축에 집중된 청주공항의 최대이용권인 수도권 이남 이용객의 접근성과 이용율이 낮다. 따라서 동서횡단 5축 고속도로(당신-울진: 2019년내 완공)중 노선 조정을 통해 천안~오창 IC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필요가 있다.

동서횡단 5축 고속도로의 노선 조정을 통해 천안~오창 IC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를 통해 서해안·당진권과 천안·아산권의 연계를 통한 산업다각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05년 7월 당진~천안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2006년 6월 청주국제공항과 직접연계성이 있는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다.

⑥ 청주국제공항~천안 전철연결

청주공항의 절대적 항공수요 창출처인 수도권 남부권, 충남 북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권과의 직접연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서해안권 주민들의 공항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세종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통운영중인 서울~천안간 전철 노선을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여 철도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청주~천안간 수도권 전철 연결을, 천안~청주까지 54.1km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수도권 연장전철이 천안까지 개통됨에 따라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전철 연계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본 구간의 조기 개통을 통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⑦ 대전~세종시~청주(공항)간 LRT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계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면, 12부 4처 2청의 이전으로 세종시의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첨단과학단지, 청주공항간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조기에 달성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전~세종시~청주(공항)간 LRT 신설은 대전과 세종지, 오송, 청주국제공항, 증평을 주요 경유지로 하여 63.5km 연장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동 노선이 세종시 건설 및 고속철도 개통 등에 의해 사업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조기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전~세종시~청주(공항)간 LRT를 증평까지 연결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⑧ 세종시~오송~청주(공항)간 BRT

BRT는 청주권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중이며, 고속철도 및 충북선과의 연계된 노선구상과 세종시, 증평 및 대전과의 연계성을 모색을 위해 필요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계획(안)상 BRT 계획이 수립중이기 때문에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이다.

세종시 광역교통계획상 1단계로 세종시~오송단지(11.2km)를 연결해 2012년에 운영하고, 2단계로 오송단지~청주(공항)(11.8km)을 연결해 2013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노선(수도권~충주~문경 연장)의 장기계획과 병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신교통수단의 도입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충청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과 3개 시도 공동발전연구단에서 검토되었던 상생전략방안들과 최근 광역경제권사업의 일환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는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던 충청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총망라하는 시군구 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충청권경제협력의 당위성과 충청민의 입장을 도출하였는바, 설문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광역경제권 형성을 충청권 경제의 획기적 도약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셋째, 광역경제권사업 지역선도프로젝트 공모시 충청 3개 시도간 경합보다는 공동유치를 위한 담합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정치적 논리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충청권 경제협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대비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충청권경제협의회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광역경제권 출범을 대비하여 충청권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향후 국가균형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태동되는 <충청광역경제권협의회>와 <충청광역경제권지원단>으로의 자연스러운 이양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충청권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충청광역경제권협의회의 모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권특별법(가칭)과 광역경제권특별법과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법리적 혼돈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충청권 경제협력을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3개 시도연구원이 합의하여 창설한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연구조직을 흡수통합하고, 이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충청권협력방안과 광역경제권 공

동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비하여 법 충청권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타 시도 및 시도연구원과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대로 충청권 시도연구원 중심의 공동세미나를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충청권의 입장을 언론과 정부에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권 산업클러스터를 조기에 조성함으로써 對수도권기업의 유인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사업의 공동유치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단위사업별 TF팀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에 노출되는 충청권의 모습은 때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상호 협력하기보다는 충청권내에서도 출혈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바, 예를 들어 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청권 온천관광벨트 구축 및 온천축제와 같은 실천가능한 공동협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충청권 차원의 공동유치전략을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사안별 TF팀을 운영하여 공동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과 구체적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은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시와 오송-오창, 대덕R&D특구를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같은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보다 새로운 안목으로 전혀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충청권을 의료관광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충청권은 바이오산업이 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온천관광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대학종합병원들이 군집해 있으며, 청주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아시

아는 물론 전 세계로 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이처럼 충청권은 그 어떤 국내 및 아시아 도시보다도 아시아 의료관광허브로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일명 <아시아의료관광허브 충청> 프로젝트를 사전작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공동으로 유치하고 그 다음으로 침복단지를 아시아 의료관광허브로 본격화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우선은 일차작업에 이러한 충청권의 <아시아의료관광허브 충청> 프로젝트를 접목하여 종합플랜을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충청권 내부적으로는 폐쇄위기에 놓여 있는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가는 온천관광지역 재건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충청 문화관광생활경제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3개 시도 접경지역에 월트 디즈니랜드 공동유치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의 재창조와 연계하여 시설의 재활용을 꾀할 수 있으며, 아시아 의료관광허브화 프로젝트와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그동안 서울시가 노력해 왔던 월트 디즈니랜드 유치활동이 소강상태에 빠져있으며 5+2광역경제권과 연계한 비수도권 안배차원에서 대정부 설득력이 높다 하겠다. 특히 대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국제공항은 물론 전국의 어디에서나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수요유발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겠다. 대전광역시가 지역경제에 큰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만 all-in하기 보다는 경제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랜드 공동유치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충청광역경제권 출범을 앞두고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는 각개전투를 하기보다 연합전선을 펼쳐야만 광역경제권사업에 유리한 교두보를 점할 수 있고 충청권의 상생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결성되어있는 - 그러나 아직은 그 역할이 가시적이지 못한 - 충청권경제협의회 산하에 가칭 충청광역정책TF팀을 발족하여 3개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고 광역경제권 관련 각종 국책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공동유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영주, 「광역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대전충남 경제연구회 발표자료, 200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시·도 설명회-설명회자료」, 2008
- 국토연구원,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2006
- 국토연구원(2007), 대전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
- 김연명의(2005), 지방공항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항의 경제적 가치산정과 공항운영정책, 연구총서 2005-06, 교통연구원
- 김용웅, “외국의 지역계획 및 개발동향(해외출장 보고)”, 「국토정보」, 1995
- 김용웅, “외국의 지역계획제도 특성 비교: 영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국토정보」, 1995
- 김용웅,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방향」, 이정식·김용웅(편저), 『세계화와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총서 3, 한울 아카데미, 2001
- 김제철(200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국제항공화물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1-10, 교통연구원
-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 「충청권 경제협의회 실무협의회-회의자료」, 2008
-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 「충청권 경제협의회 회의자료-제3차 회의-」, 2008
- 대전발전연구원(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방안
- 민경휘, 「영국의 지역발전기구와 정책시사점」, KIET 정책자료, 2001
- 박경·장재홍·정준호·정옥주, 『주요국의 지역정책-EU·영국·프랑스·일본』, 지역정책 자료집 08-1,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
- 박병호·이선하·이재영(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광역교통계획 방향”, in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 2005년 추계전문가토론회,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광역개발방향’, 2005. 11. 18
- 박우서, “지역발전과 민관협력형 지역거버넌스 구축”, 「세계화와 지역발전」,

- 한울아카데미, 2001
- 배준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사회과학연구」, 2001
- 송두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지역협의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2004
- 원광희(2006), 중부권 대형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충북지역개발회 주관 세미나.
- 유광의(2007), 공항별 활성화 세부추진전략, 공항공단.
- 이규환(2004), 「한국도시행정론 :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이재영(1999),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통신통근인구에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36회 학술발표 proceedings.
- 이재영(2006), “대전시의 광역교통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지자체연구원 광역교통세미나 자료집, 한국교통연구원, pp. 173-204.
- 이철우·이종호, “EU의 지역정책변화와 지역혁신정책의 함의”, 「국토연구」, 제43권, 2002
- 임경수(1997), “삶의 질’ 과 신도시 환경정책”,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2집1호.
- 유럽지역연구회 편(강현수 외 9인),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아카데미, 2003
- 임성일, “영국의 지방재정제도”,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제도 비교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 신동호·강영주, 『충청권 지역경제 정책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04, 2006
- 정구현 외(1994),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나남.
- 정옥주, “프랑스 수도권 광역계획(SDRIF2030)의 성격과 시사점”,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7
- 정옥주,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련 외국 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국토연구원, 2007
- 정옥주, “지역 간 공동발전의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국토포럼, 대구경북발전연구원, 2006

- 정준호, “영국(잉글랜드) 지역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10월호, 2004
- 정준호, “1997년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의 영국 지역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일고찰: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권 제1호, 2004
- 정준호,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1997년 이후의 지역정책 추진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농정연구」 18호, 2006
- 조용석(1996), “공공계획에서 ‘삶의 질’ 계획지표의 설정과 활용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숙, “지역 거버넌스와 영국의 지역계획 수립실제”, 「국토」 252호, 2002
- 최병두(1996), “사회환경적 「삶의 질」의 의의와 지역차”, 환경과 사회. 통권 제9호. 한국환경·사회정책 연구소편.
- 충북개발연구원(200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 「충청권 종합발전 구상(안)」, 2007
-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 「제3차 충청권 공동발전 실무워크숍」, 2007
-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 「제4차 충청권 공동발전 실무워크숍-충청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향」, 2007
-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충청권 공동발전 세미나」, 2007
- 충청북도(200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논리개발연구.
충청북도, 교통과 내부자료
- 하성규·김재익(199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와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 32권 제 5호
- 하혜수(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 한국교통연구원(2007), 대전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 공청회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충청지역의 산업연권분석」, 2007
- 한국지방자치학회, 「21세기형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재정립 모델 연구-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2006

- 한국지역학회, 「신행정수도와 충청권 발전전략 구상-워크샵」, 2004
- 한원택(1992), 「도시·지방행정론(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 한표환(1994), 도시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row, Kenneth J., (2000), “Observations on social capital“, in : Dasgupta and Serageldin(eds), 2000, pp.3 ~ 5.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ryant, B.,(ed), (1995), *Introduction;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Island Press.
- Dasgupta, Partha and Serageldin, Ismail(eds), (2000),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e World Bank.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rootaert, Chris, (1998), “What is Social Capital?“, *The World Bank Resource Paper*.
- Meadows, Donella H.; Meadows, Dennis L.; Randers, Jorgen; and Behrens III, Willam W., 1972, *The Limits To Growth*, A Potomac Associates Book.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35-42.
- ,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obison, Lindon J. and Siles, Marcelo E., 2000, “Social Capital: Sympathy, Intangible Goods, and Institutions“, Resource Paper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 Rubin, Isaac Ilyich, 1989,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PLUTO PRESS.
- Singer, H. W., 1965, “Social Development: Key Growth Sector,“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March, 1965.

<http://kosis.nso.go.kr>

<http://www.airportal.co.kr/knowledge/statistics/KiMain.jsp>

정책연구보고서 2008-14

충청권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통합방안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for the competitiveness
intensification of the Chungchong province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12월 31일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월평동 160-20)

전화: 042-471-5620 팩스: 042-471-5615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노산인쇄출판사 TEL: 042-254-9392 FAX: 042-530-352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